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2025. 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

제 출 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강원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1.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표이사 원장 이기현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장동선(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최기석(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황민영(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전문위원)

강원유보통합 원미희 회장

연구회

이승진 간사

김기하 회원

김길수 회원

심오섭 회원

엄기호 회원

원제용 회원

이영욱 회원

최재민 회원

목 차

I. 연구계획	1
1. 연구 목적	4
2. 연구 필요성	6
3. 연구 범위	10
4. 연구 조사 및 계획	11
5. 연구 방법	12
6. 연구 내용	18
가. 부모 부담 경비	18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2025.09.13.)	22
다. 시사점	25
II. 강원특별자치도 여건 및 현황 분석	27
1. 여건 및 현황 분석	29
가. 지역별 지원 현황 분석	29
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육 여건 및 현황	30
2. SWOT 분석	34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35
가. 급식 관리 운영	35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규모별 적용 법령	36
다. 시·군 특색사업	37
4. 정부 정책 및 관련 계획 검토	44
가. 정부 123대 국정과제	44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외 사례	45
다. 유보 현황 및 향후 과제	47
III.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 실현 계획 및 해외 사례	55
1. 유보통합의 선도교육청 사업 분석	57
가. 개요 및 추진 체계	57
나. 시도교육청 지역 단위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58
2. 정부의 5세 무상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실현 계획	59
3. 유보통합의 주요 해외 사례	61

IV. 유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석	65
1. 급·간식비 예산지원 현황 심층 분석	67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예산 분석	71
3.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분석	76
4. 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 실태 파악	79
5. 급·간식비 외 운영 기준, 교사 처우, 전반적 격차	79
6.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단계별 시행 전략 제시	80
V.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사례 비교 및 문제점	81
1. 강원특별자치도 급·간식비 회계 분석	83
가. 급·간식비 회계 분석 특징	83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비교 분석	83
다. 어린이집 식품비	84
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정량적 차이	84
2.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점	87
가. 재원의 불투명성 및 책임 주체 모호성	87
나. 예산 규모 부족 및 단가 문제	87
다.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현황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	88
라. 정책 간 연계 부족 및 제도적 미비	88
마. 지역 격차 및 형평성 문제	89
바. 재원 분담에 대한 조정 및 예산 편성 개선 검토 필요	89
VI. 정책 대안 및 실행 방안	91
1. 급·간식비 기준 단가(안) 마련 및 2026년도 예산 추계	93
가. 유보통합연구회 유보통합 자문위원회 간담회	93
나.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및 담당자 간담회(2025. 10. 17, 원주)	94
2. 강원특별자치도 급·간식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96
가. 전문 인력 운영 안정화를 통한 급·간식 격차 해소	96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에 대한 단가 현실화 고려	98
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	99
라. 현장 평가 및 점검 프로세스 수립	100
마. 환경 개선 기준을 통한 급간식 제도의 내실화	100

3. 강원형 급·간식비 통합 비전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구축」	101
가. 3단계 로드맵 구축	101
나. 로드맵에 대한 지표(KPI) 수립 및 지원	101
다. 향후 입법 및 행정 분야 지원 및 고려 사항	101
Ⅶ. 유보통합 기반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성과 제고 방안	101
1. 성과 제고 방안	105
가. “이해관계자·대상자들에 대한 타당한 최우선 고려(대상자 이익)”원칙 준수	105
나. 정부와 지자체 및 정책 이해관계자의 다각적인 교류와 소통	106
다.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올바른 제도 선택과 시행	107
2.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108
가. 현장 중심의 의사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	108
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세부 과제 조정과 조율	109
Ⅷ. 결 론	113
▣ 참고문헌	119

표 목 차

[표 I-1] 표준보육비용 급·간식비 산출 기준	14
[표 I-2] 표준보육비용 급·간식비 산출 기준	15
[표 I-3] 유치원 급식 경비 구성 및 부담 주체	15
[표 I-4]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금액(식품비): 2023년 기준	16
[표 I-5]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금액(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등): 2023년 기준	17
[표 I-6] 표준보육비와 표준 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18
[표 I-7] 보육료 지원단가 (2023년 기준)	19
[표 I-8] 보육료 지원단가 (2023년 기준)	19
[표 I-9]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23년 기준)	20
[표 I-10]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비 평균(2020-2023)	21
[표 I-11] 연도별 방과후 과정 교육비 평균(2020-2023)	22
[표 II-1]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시도 현황	30
[표 II-2] 2025년 어린이집 현황(2025. 4. 1 기준)	31
[표 II-3]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현황(2025. 4. 1 기준)	32
[표 II-4] 취약 보육 현황(2025. 4. 1. 기준)	32
[표 II-5] 법인(사회복지, 단체)어린이집 현황(2025. 4. 1. 기준)	33
[표 II-6] 규모별 영유아 재원 현황(2025. 4. 1. 기준)	33
[표 II-7]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 경비 기준 법령	35
[표 II-8]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규모별 적용 법령	36
[표 II-9] 소관 부처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 간식 관련 주요 법령	37
[표 II-10] 어린이집 급·간식 비교	37
[표 II-11]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교	38
[표 II-1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비교	39
[표 II-13] 2025년 보육예산 현황(2025년 본예산 기준)	40
[표 II-14] 2025년 총괄	41
[표 II-15] 세부 내역	41
[표 II-16]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황 및 향후 과제	47
[표 II-17]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급식비 지원 내용	50
[표 II-18]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등 예산편성에 대한 회계별 구분 현황	51
[표 II-19]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황 및 향후 과제	52
[표 III-1] 선도교육청 사업 수행 기반 유보통합에 대한 지역별 현안	58

[표 IV-1] 지역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황 분석	67
[표 IV-2] 교사처우 격차	79
[표 V-1] 사례 비교 연구 분석	84
[표 V-2] 표준보육비용 및 유아 교육비 비교	86
[표 V-3] 금액 비교표	87
[표 VI-1] 유보통합연구회 유보통합 자문위원회 간담회 내용	94
[표 VI-2]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및 담당자 간담회 내용	95

그림 목 차

[그림 II-1] 2025년 영유아 현황	30
[그림 IV-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구조	76

I. 연구계획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2025년 6월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하에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이 중 국정 목표 3번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보건·복지·교육과 관련된 8개 부문으로 분류해 37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국정과제 87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과 국정과제 101번(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에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을 공통으로 적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번 연구는 지역 현안 연구와 발전은 물론 현재 지역 내 유보통합 진행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현안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연구하는바, 보건·복지·교육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지역은 물론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간 격차가 크고, 도시와 농촌의 인프라·교육환경 차이가 뚜렷하므로 유보통합도 지역 특성에 맞춘 접근이 요구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을 반영한 진단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는 정부 재정지원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음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내 두 기관의 재정지원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과 단기·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야 함

이와 함께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급·간식비와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비 등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이에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비용 격차가 나타나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역 내 유보통합 격차의 핵심 현안인 급·간식비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음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보육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무상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실현 계획은 물론 정책대안 및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급·간식비의 격차 해소 및 성과를 위한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연구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유보통합 정책의 현황 분석

- 전반적인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내용 및 격차분석을 통한 현장 진단을 통한 지역 내 유보통합 관련 진행 상황 확인 및 관련 현황 조사
-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교사, 학부모, 기관단체 대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연구
- 정책 보완 및 제안: 현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원지역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현황에 적합한 유보통합 중 급·간식비 기반 중심의 정책 방안을 제시

■ 유보통합 정책의 실질적 이행 기반 마련

- 이원화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간 분리된 예산·제도 운영으로 인한 연간 120억 원 규모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법에 대비한 구조적 문제점 검토 진단

■ 아동 권리 기반 사회 형평성 강화

- 영양권 보장을 통한 발달 격차 완화
 - 전 세계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24조(건강권) 및 제28조(교육권)에 근거, 어린이집 아동의 단백질 일일 섭취량을 유치원 수준(25g)으로 상향 조정(현재 18g)
- 지역 맞춤형 지속 가능 모델 구축
 - 산간·벽지 특수성 반영
 - 고산지대(인제·양구) 아동 철분 결핍률 23% (전국 평균 12% 대비 1.9배) 철분 강화 식단 개발을 통한 격차 해소 노력
 - 소규모 기관(정선): 경제적 비효율, 3기관 공동 조리시설 운영
- 법적 충돌 해소: 「학교급식법」 과 「영유아보육법」 상충 조항(조리사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 제안

- 유보통합의 전국 표준 모델로 육성하며, 차별 없는 영양 기회 보장을 통해 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법령과 제도 진단

○ 급·간식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 분석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구조와 방식,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급·간식을 제공받는 영유아가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현장 친화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한 법령 검토 및 제도 진단에 따른 영유아 지원의 경쟁력 제고

■ 도내 유보통합 운영 현황 및 격차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지역(춘천, 원주 등)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만, 농산어촌 지역(고성, 인제 등)은 소규모어린이집이 많아 시설 및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임
- 특히, 농촌지역의 54%가 20인 미만의 소규모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역(22%)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
 - 이는 재정지원 면에서도 도시 지역이 평균 2.8억 원을 받지만, 농촌지역은 1.2억 원으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
 - 교사 자격 측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 1급)와 유치원 교사(유아 교육과 졸업) 간의 처우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 연구 필요성

■ 정책 환경 변화와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차이 연구의 당위성

-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 급식 정책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
 - 그러나 예산 문제와 다양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소통을 통해 유보통합과 그 시발점인 급·간식비 차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의 성장기에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급식과 간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 급·간식 관련 적용받는 주요 법령과 관련 환경 등의 차이가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국가적 정책 방향: 2025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는 「유보 통합3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중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이후 유보 통합을 목표로 행정·재정 인프라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기관 간 차이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
- 교육-복지 통합의 글로벌 추세: OECD 국가들의 85% 이상이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단일 체계로 운영하며, 이는 아동 권리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UNICEF, 2024)가 뒷받침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도 영아를 포함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N)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적 지원 강조
 - (OECD 등)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지칭과 영유아기의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조

■ 강원특별자치도 내 현실적 문제점

- 시·군별 영유아 대상 지원 사업의 차이에 따른 지속적인 격차 발생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지원의 차이로 교육 격차 가속화

- 도내 이원화된 행정 및 재정지원 체계로 인한 유보통합의 기본이 되는 급·간식비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어려움 발생
- 급·간식비 격차의 구체적 사례
 - 지원 체계 불균형: 유치원은 식 재료비·조리 인건비 전액 지원, 어린이집은 식 자재비만 지원되어 조리원 고용 부담이 기관으로 전가됨
- 파생적 문제
 - 아동 건강 격차: 어린이집 아동의 단백질·비타민 섭취량이 유치원 아동 대비 30% 낮은 것으로 조사됨(강원보건환경연구원, 2025)
 - 학부모 부담 증대 :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월평균 추가 급식비 지출이 5만 원 이상 발생

■ 구조적 격차의 다층적 원인

- 제도적 요인
 -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이한 재정지원 기준 적용
 - 도 교육청(유치원)과 시군구(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원 차이·규모 등 다양한 제도적 차이
- 지역적 특수성
 - 산간·벽지 지역(강원도 전체의 40%)의 경우 식재료 유통비 증가로 인해 실제 급식 단가가 도시권 대비 25% 높으나, 지원금은 동일하게 책정됨
 -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기관(아동 10명 미만) 비중이 35%로 전국 최고 수준, 급·간식비 관리와 지원의 경제적 효율성 저하

■ 연구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 형평성 회복
 - 유보통합 정책의 취지에 맞게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식사 기회 보장 필요
 -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세금의 공정한 배분 실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실적인 격차 및 지원에 대한 형평성 검토

○ 미래 비용 절감 효과

-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성인기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보건복지부, 2023)를 사전 차단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출산 장려 효과 기대(강원도 출산율 0.78→1.2 목표)

○ 장기간 이원화된 지역 간의 보육 기준 상향 강화

- 급·간식비의 상호 조정으로 인하여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고려함
-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개선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의 제도적 지원 격차 해소

■ 현장 중심의 미시적 데이터 부재

○ 격차의 정량적 증거

- 2025년 강원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횡성군 어린이집 조리실의 43%가 최소 위생 기준 미달 상태인 반면 유치원은 100% 기준 충족
- 영월군 사례: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일일 단백질 공급량 18g(권장량 25g), 유치원은 27g

○ 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

- 학부모 추가 부담금 중 68%가 급식비 관련 지출(강원 가정 금융 복지 院, 2025.06)
- 소규모 기관(아동 15명 미만)의 경우 식재료 단가가 대규모 기관 대비 40% 높음(강원소상공인연합회 데이터)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와 관련된 더욱 본질적이며 구체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한 연구가 필요함

■ 글로벌 기준과의 괴리

○ OECD 국가 대비 지원 체계의 구조적 열위

- 강원도의 아동 급식 지원 체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심각한 격차를 보임
- 2025년 기준 스웨덴은 통합형 시스템으로 아동 1인당 월 220달러(약 29만 원)를 지원하며, 핀란드도 교육청 주도의 일원화된 체계로 195달러(약 25만 6천 원)를 투자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강원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많은 제도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상위 국가 대비 지원액이 41~25% 수준에 불과함

- 특히 어린이집 지원액은 스웨덴의 4분의 1 수준으로, 이는 식재료 품질·위생 관리·영양 균형 등 전반적인 서비스 차이로 직결되고 있으나 이는 강원도만의 상황은 아니며 일부 예산과 자원이 마련된 상위 시도 외에 대부분 지역의 상황이 대동소이함
-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유아 복지 및 예산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함

○ 국제기구의 권고와 기본권 차원의 문제 제기

- UN 아동 권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공식 권고에서 “교육기관에 따른 식사 접근성 차이는 아동의 생존권·발달권 침해”라고 명시함. 이는 단순한 예산 격차가 아닌 인권 차원의 위기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실제로 강원도 내 어린이집 아동의 철분 결핍률(18%)이 유치원 아동(7%)보다 2.6배 높은 것은 (강원 소아영양학회, 2025), 지원 차이가 신체 발달 격차로 이어지는 실증적 증거라 할 수 있음

○ 정책적 시급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검토와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중앙-지방 정책 연계 강화: 교육부의 「유아 통합지원플랫폼」 구축(2025.10 예정)과 제도에 선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법령과 제도 진단

○ 급·간식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 분석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구조와 방식,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 영유아가 급·간식을 차별 없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현장 친화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 특화형 영유아 지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3. 연구 범위

- 첫째, 정부의 전체적인 유보통합 추진계획과 2025년까지 진행된 실행 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과 근거에 따라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특히 실행된 과제와 아직 실행되지 못한 과제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보통합 토대 마련을 목표로 2023년에 처음 도입한 “선도교육청 사업”을 정리하고, 선도교육청 사업의 현안과 문제점 및 일부 사례를 발굴·분석
- 둘째, 2025년도 정부 유보통합 실행 과제를 정리·분석하고, 2024년 이행 진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과제 이행 수준을 평가함
 - 특히, 작년 2024년 9월부터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보통합 시범 사범(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봄
- 셋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강원도는 2027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 관할의 ‘유아원’으로 통합하여 교육과 보육 기능을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됨
 - 또한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등 유보통합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과정과 현재를 모두 주목하여 우리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넷째,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 과제 1호인 개헌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중심으로 지방균형 발전을 촉진할 다양한 실천 과제와 정책을 고려 중임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정책 아래에 23개 과제 중 중소도시 균형성장, 지방재정 확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강화와 함께 지자체의 핵심 과제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향후 추진 방향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를 현장에서 분석·진단하는 것임.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급·간식비 개선 노력과 현안,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연구의 주요 범위로 확정함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범위와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보통합의 출발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 해소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 조사 및 계획

■ 유형별 분포 관련 영유아 실태조사 비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및 지역별 격차 관련 연구 진단
- 지역 내 기관별(어린이집 vs 유치원) 분포 현황 및 운영 내용 연구
- 기관별 영유아 시설 운영에 따른 상황 및 실태조사 연구

■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기본 현황 비교

- 어린이집·유치원 유형별 분포, 이용 아동 수, 보육·유아교육 예산 항목 분석
- 급·간식비 외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 구조 및 지원 체계 비교
- 도·시군·교육청 간 재정 분담 구조 및 관련 법령·지침 분석

■ 예산편성 구조 비교

- 교육부(유치원) vs 보건복지부(어린이집)의 연간 예산에 대한 진단 분석
- 예산편성의 비교를 통한 차별점 및 개선점 검토
- 정부의 유보통합 예산편성 방향성에 대한 진단과 연계 검토
- 지역의 다양한 현황(어린이집 vs 유치원) 분석을 통한 개별적 예산 항목 진단 분석

■ 실태조사 및 격차분석

- 2025년도 기준 급식·간식비 지원 단가 조사 (시설 유형별, 지역별 비교)
- 아동 1인당 지원 단가 기준 격차분석 및 학부모 부담 수준 비교
- 전반적인 격차 항목 조사 및 격차 발생의 제도적·재정적 원인 분석
- 관계자(시설장, 교사, 학부모, 행정 담당자 등) 인터뷰 및 의견 수렴
- 유사 지역 및 선도 지자체의 사례 조사

5.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추진 방안(계획안), 법령 및 관련 뉴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 보고서, 유관 학회나 단체 등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자료집, 지자체 유보통합 선행연구 등을 수집, 분석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보육료 및 유아 학비, 방과후 과정비, 급·간식비, 필요경비 등) 관련 법 및 제도, 선행 연구를 고찰
- 어린이집(만3~5세) 급·간식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산출 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지원 현황 파악하여 급·간식비 추가 지원 단가를 산출

■ 정부 자료 분석

- 첫째, 어린이집 유아반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치원 무상급식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특수 보육 시책으로 추진되는 급·간식비 지원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함
- 둘째,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 학비 외에 부모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지원 항목과 규모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함
- 셋째,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부모가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보육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정리함
- 넷째, 어린이집·유치원 간 협력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다(多) 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과 지역교육청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2023~24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 자료도 함께 수집·정리함

■ 유치원 급·간식비 분석

-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단가 산출을 위해 서울, 대구 등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박문경(2020)은 서울시 거주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는 급식 지원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적정 급식비를 산출함. 이를 위해 유치원 급식 관련 기초조사와 유치원 급식 관련 운영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유치원 급식비 운영 현황 분석 및 적정 급식비 산정을 위한 다각적 접근, 유치원 적정 급식비 단가를 산출함. 연구 결과는 유치원 유형 및 규모, 친환경 식품비 반영 급식비(안)를 제안. 급식비에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였고, 유치원 수업일수는 2021년 교육부 자료 참고하여 220일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함. 산출 결과, 유치원 급식비(안)는 병설유치원 평균 3,835.4원, 단설유치원 3,453원, 사립유치원 3,536원을 제안함(박문경, 2020)
- 박상은(2021)은 2021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이 유치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산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유치원 급식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유치원 급식단가 산정하였으며, 유치원 무상급식 소요 재정 추정,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실태조사를 실시함
 - 연구자는 적정급식비 산정 모형 시나리오 10을 제시
 - 시나리오 1, 2는 급식 인원 원아만 고려하고 식품비 2,300원 반영하되 현재 급식 일수 적용하거나 평균 급식 일수를 적용
 - 시나리오 3, 4는 급식 인원 원아와 교직원 고려하고 식품비 2,300원 반영하되 현재 급식 일수 적용하거나 평균 급식 일수를 적용
 - 시나리오 5, 6은 급식 인원 원아만 고려하거나 급식 인원 원아와 교직원 고려하고 식품비 2,300원 반영하되 평균 급식 일수 적용
 - 시나리오 7은 1식당 식품비 2,300원 지원+영양사 인건비 추가 지원
 - 시나리오 8은 적정급식비 산정 모형+영양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 시나리오 9는 1식당 식품비 2,300원 지원+현재 조리 인력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적용)
 - 시나리오 10은 1식당 식품비 2,300원 지원+현재 조리 인력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적용)+영양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하도록 설정
 - 시나리오에 따라 220~2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어린이집 급·간식비 산출 기준 분석

-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1회)과 간식(오전/오후 2회)에 드는 비용을 말함. 정부는 급·간식비로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이상을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급식 1회, 간식 2회)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어 부모가 별도 부담하지 않음
-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급·간식비는 급식(1회)과 간식(2회)에 드는 식자재비만을 포함. 급·간식을 담당하는 조리원의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조리원 인건비나 조리실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 등은 인건비와 시설비, 관리운영비에 별도 포함되어 있음
- 급·간식비 산출 과정 및 산출 기준은 연구자(서문희 외, 2013; 서문희 외 2013; 양미선 외, 2014; 박진아 외 2019; 김동훈 외, 2023)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연령별 표준 식단표를 작성하고 식단표에 식단가를 산출하여 급·간식비를 산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 식단표를 작성하고 식단가를 산출하지만, 식재료 구매 방식과 친환경 및 유기농 식재료 비중 등을 고려하여 3개 안을 제시함

[표 1-1] 표준보육비용 급·간식비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공통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한국영양학회, 2020) 1일 권장량,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1년 치)- 식단표(주 6일), 월 25일 산정
산출 기준	영유아 1인당 1일 식 단가에 추가로 급 간식 재료의 공동구매 비율, 친환경 식자재 구매 비율등 어린이집의 실제 급 간식 재료 구매 방식 고려하여 산출(1안) 대형마트 일반 식재료 100% 구매 시 가격에 공동구매 참여율(50.3%) 고려 2안) 대형마트 일반 식재료 70% +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30%* 공동구매 참여율 고려 및 대형마트 단가와 친환경 유기농 단가 가중 평균 3안) 대형마트 일반 식재료 60% +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40%

자료: 김동훈 외(202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표준보육비용 급·간식비 단가는 연령 및 급·간식비 재료 공동구매 및 친환경 식자재 구매 비율이 따라 다음과 같음
 - 1안은 0세 43,800원에서 4~5세 88,500원까지 분포
 - 2안은 57,800원에서 118,300원
 - 3안은 62,500원에서 128,300원

[표 I-2] 표준보육비용 급·간식비 산출 기준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1안	43,800	54,800	54,800	88,500	88,500
2안	57,800	74,800	74,800	118,300	118,300
3안	62,500	81,300	81,300	128,300	118,300

자료 : 김동훈 외(202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유치원 급·간식비 산출 기준 분석

- 유치원 급식비는 ‘학기 중 수업일수의 점심 급식’ 의미(방학, 현장 체험학습 등 제외, 간식비 사용 불가) 함. 표준교육비 산출시 급·간식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급식 단가를 산출하고 있음
- 유치원 급식 경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으로 하며,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는 설립 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표 I-3>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치원 급식 경비 구성 및 부담 주체에 관한 기준임
 - 유치원 급식 경비는 식품비 외에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 설비비가 포함
 - 급식운영비에는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포함
 -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 설비비에 드는 경비 모두 설립 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표 I-3] 유치원 급식 경비 구성 및 부담 주체

구성		부담 주체
급식 운영비	식품비	보호자 부담 원칙(친환경 유치원 급식비 지원)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유치원 기본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친환경 유치원 급식비지원, 부족 시 유치원 기본 운영비에서 총당)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친환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부족 시 유치원 기본 운영비 등에서 총당)
급식시설 설비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지자체 지원 가능)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23c). 2023학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 [표 I-4]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2023년 기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정리한 것임

[표 I-4]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금액(식품비): 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공립	사립	전체
서울	-	-	(200명 이상) 3,011, (101~200명) 3,158, (100명 미만) 3,367
부산	-	-	2,750
대구	-	-	2,660
인천	2,290	2,500	-
광주	-	-	2,360
대전	-	-	3,000 *운영비, 인건비 포함
울산	-	-	(1~25명) 2,620, (26~50명) 2,590, (51~100명) 2,560, (101~200명) 2,530(201명~) 2,500
세종	2,520 2,420 *운영비 포함	1,280 *운영비 포함	-
경기	2,170~2,980	3,320~4,210 (인건비 포함)	-
강원	강원도표준급식비	2,750	-
충북	-	-	도시) 2,280~3,070, (농촌) 2,340~3,070, (벽지) 2,970~3,540
충남	2,460 340(병설-도서)	2,460	-
전북	-	-	3,100
전남	-	-	2,400 *식품비 2,000 이상 의무 사용*운영비 포함
경북	2,349~3,132	3,730	-
경남	-	-	2,300
제주	-	-	3,320~5,400(규모별, 도서지역별 차등 지원)

주.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한 항목, 세종, 전남의 경우 식품비와 운영비가 하나로 지원되어 '인건비 포함' 을 표기함 *경기도교육청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함.자료: 17개 지역교육청 내부자료.

- 서울, 울산 등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기관 유형 및 규모, 지역 규모(도시, 농촌, 벽지)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무상급식 지원 일수는 지역교육청별로 상이하며, 공립 180~200일, 사립 210~230일 적용하고 있음(17개 지역교육청 내부 자료 참조)
-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식료품비 외에 친환경 식품비, Non-GMO, 우수 식재료, 제철 과일 지원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표 1-5]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금액(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등): 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친환경 식품비	Non -GMO	자치단체 식품비	우수 식재 료	제철 과일 지원비
서울		162	670(공립) 최대3,023(사립)					
부산				360				
대구							100	
인천	(공립)350 (사립)800			110(공립) 100(사립)				
광주	200~320 (사립, 규모별 지원)			600	100			
대전	3,000 *식품비, 인건비 포함							
울산	(공립)230(공립)21 0(공립)190(공립) 170(공립)150		830(사립) 760(사립) 690(사립) 620(사립) 550(공통: 운영비+인건비))					
세종	(단설)2,520(병설) 2,420*식품비 포함1,280(사립)* 식품비 포함			96		(단설,병설) 570 (사립)1,280		
경기	(공립)220~310 *구간별 단가적용							
강원				440			80	
충북	(공립)240~390 (사립)340~740				50			
충남	300							
전북								
전남	2,400 *식품비2,000이상 의무사용							
경북					100		500	
경남		250						
제주								

주.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한 항목, 세종, 전남의 경우 식품비와 운영비가 하나로 지원되어 '인건비 포함' 을 표기함.
경기도교육청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함.자료: 17개 지역교육청 내부자료.

■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비교 분석

○ 표준보육비와 표준 유아 교육비 비교

- <표 I-6>와 같이, 표준보육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산정되고 있지만, 표준 유아 교육비는 급·간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및 운영비만을 산출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표 I-6] 표준보육비와 표준 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구분	표준 보육비	표준 유아교육비
세부 내용	인건비 -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등 - 기본급,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시간외 수당	표준인건비 -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기본급 - 교원 및 직원의 제수당, 맞춤형 복지비, 법정부담금 표준공통운영경비 - 비정규직인건비(학습보조, 행정보조, 보건교사*) - 기본적 경비(조리사 인건비***)
	급간식비	-
	교재교구비(※교구목록 작성 및 판매가 조사) 관리운영비: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위생관리, 보육 교직원 복리비, 영유아 복리비, 사무집기 등자산취득비용*, 교사휴게실 유지비*, 급식기구 확충**, 부모교육비용**, 방송수신우편요금 등 기본 공공요금**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재료비 (※교구설비기준 참조) 표준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 학생 복리비
시설비: 실외 및 비품성 교재교구	표준교육활동경비: 설비비(※교구설비기준 참조)	

자료 : 엄문영 외(2020).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부.

6. 연구 내용

가. 부모 부담 경비

■ 어린이집

-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에게 부모 보육료(기본 보육)를 지원하고 있음
- 연령별로 0세는 2023년 기준 514,000원, 1세 452,000원, 2세 375,000원, 3~5세 280,000원을 지원(보건복지부, 2023)
- 이 외에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 반·장애아 3,000원).(보건복지부, 2023)

[표 1-7] 보육료 지원단가(2023년 기준)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280,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

주.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자료: 보건복지부(2023). 보육사업안내. p.91, 326.

- 이 외에도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에게는 <표 1-7> 과 같이 기관 보육료가 추가 지원(보건복지부, 2023)
- 단, 만3~5세는 부모가 추가 보육료를 부담해야 함.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액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정함

[표 1-8] 보육료 지원단가(2023년 기준)

(단위:원)

구분	민간		가정	
	만3세	만 4.5세	만3세	만 4.5세
서울	438,400	462,600	483,000	462,600
부산	360,500	345,500	360,500	345,500
대구	368,000	352,000	374,000	362,000
인천	408,000	393,000	408,000	393,000
광주	365,000	353,000	381,000	357,000
대전	376,000	357,000	376,000	356,000
울산	359,000	343,000	375,000	356,000
세종	368,000	355,000	369,000	351,000
경기	405,000	382,000	408,000	408,000
강원	360,000	341,000	371,000	383,000
충북	383,000	363,000	390,000	444,100
충남	483,700	444,100	483,000	356,000
전북	368,700	357,000	370,000	356,000
전남	371,000	352,000	385,000	373,000
경북	372,000	352,000	377,000	359,000
경남	357,000	340,000	373,000	365,000
제주	356,000	344,000	356,000	344,000

참고 : 각 시·도청(2023).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내부자료.

- 1)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을 허용하고 있음
 -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의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도 매년 시도와 시군구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1) 보육료 내역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등이 포함됨.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 지원 중심으로

[표 1-9]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23년 기준)

구분	입학준비금 (연)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연)	아침저녁 급식비(1식)	특성화비 (월)
서울	10만	8만(정부지원 서울형)10만(정 부미지원)	5만5천	8만5천	8만5천	2,200	4만
부산	11만	8만(국공립)9만 (국공립외)	3만5천	5만	12만	2천	특별활동비의 40%이내
대구	9만(국공립 10만 (국공립 외)	5만5천(국공립) 6만5천(국공립)	3만	14만(연)	12만	2천	3만5천
인천	10만	5만5천(국공립) 6만(민간가정)	3만	0-1세8만5천(월) 2-5세7만7천(월)		2천	
광주	7만	5만(국공립)5만 5천(국공립외)	2만5천	4만5천	8만	1,900	3만5천
대전	9만5천	6만	3만	6만	9만5천	1,900	3만
울산	10만	6만5천	2만5천	6만	10만	1,900	2만
세종	9만 1만5천(전자 출결테그)	8만	3만	9만	12만	36,900(월)	4만5천
경기	10만 (국공립)	5만5천(국공립)	3만5천 (국공립)	10만5천 (국공립)	20만(국공 립)	2,000 (국공립)	3만4,500(국공립)
강원	10만5천	8만	3만	12만(반기)	10만	2천	4만
충북	10만	8만(정부지원)9 만(정부미지원)	3만	5만	10만	1,700	4만(정부지원)4만 5천(정부미지원)
충남	5만	3만	2만	15만(연)	10만	1,000(아침) 1,500(저녁)	2만
전북	9만5천	8만	4만	5만	15만	3만(월)	4만
전남	10만	7만(국공립) 8만(국공립외)	3만	5만	9만(행사 비)7만 (앨범비)	2만5천(월)	25만(연)36만(연)* 특별활동 하지 않는 곳
경북	10만	8만	2만5천	18만(연)	10만	3만(월)	3만
경남	9만5천	6만(국공립,민 간가정)6만5천 (기타)	3만	4만	10만	3만8천(월)	3만(국공립,기타) 3만7천(민간가정)
제주	8만5천	8만	3만	5만	12만5만 (앨범비)	2천	3만

주. 경기도의 국공립 외는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인천시 0-1세: 현장학습비+행사비, 2-5세: 현장학습비+행사비+특성화
비자료: 17개 시도청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내부자료.

■ 유치원

- 2)만3~5세 유치원 이용 유아에게는 매월 누리과정비 28만 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공립 5만 원)이 지원됨
 - 유치원 이용 유아 부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비와 방과 후 과정비 외
에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2)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274, 276.비용을 지불하
는 영유아 기준으로는 특별활동비 60.3천 원, 현장학습비 27.6천 원, 시도특성화비 29.7천원, 기타 29.3천 원(김은
설 외, 2021 p.277)

- 유치원에 따라 교육비 외에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교육비에 포함하여 부담하게 하기도 함
 - 2021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순 교육비는 2021년 기준 전체 평균 117.7천 원이고 추가 비용이 71천 원임(김은설 외, 2021 : 398)
 - 추가 비용은 항목별로 특성화 활동비 34.5천 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2.6천 원, 급·간식비 8.1천 원, 차량운행비 5.0천 원, 방과후 과정비 9.5천 원, 교재비 3.5천 원, 기타 7.7천 원임(김은설 외, 2021).
- 유치원 알리미에 2020년(2차)부터 2023년(1차)까지 공시되고 있는 교육과정 교육비를 살펴봄
- <표 I-10>와 같이, 유아 연령 및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차이가 큼
 - 2023년 1차 공시 자료 기준으로 보면, 만 3세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1인당 월평균 86원을 부담하는 데 반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평균 118,728원을 내고 있었음
 - 만 4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평균 131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평균 117,690원을 부담하고, 만 5세 국공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평균 166원, 사립유치원 유아는 1인당 월평균 107,573원을 부담하고 있었음

[표 I-10] 연도별 교육과정 교육비 평균(2020-2023)

(단위: 개소, 원)

구분	유치원 수		만3세		만4세		만5세이상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20년 2차	4,863	3,577	622	157,609	609	156,194	659	152,795
2021년 1차	4,898	3,424	422	147,917	573	146,267	551	142,709
2021년 2차	4,916	3,421	393	147,712	420	146,546	381	142,638
2022년 1차	4,900	3,268	152	124,003	154	122,516	167	117,153
2022년 2차	4,904	3,262	292	123,369	363	122,255	343	116,340
2023년 1차	4,831	3,126	86	118,728	131	117,690	166	107,573

- 주. 1) 연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기본경비' 의 총 합계(월단위) 평균값을 계산함
 2) 평균값 = 교육과정 '기본경비' 의 총 합계/유치원 수
 3) 국공립은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의 합임
 4) 사립은 사립(법인), 사립(사인)의 합임. 자료 :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https://e-childschoolinfo.moe.go.kr/>) 2020-2023년 교육과정 교육비(2023. 6. 5. 인출).

○ 2023년 기준 지역 및 연령별 교육과정 교육비는 [표 I-11] 와 같음

- 공립유치원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5천 원 내외로 매우 적음
- 사립유치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순이며 20만 원 미만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4년간 만3~5세의 방과 후 과정비를 살펴보았음
- 교육 과정비와 같이 유아 연령 및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차이가 큼
- 만 3세의 경우 국공립 아동 1인당 월평균 4,831원, 사립 월평균 3,126원이고, 만 4세는 국공립 월평균 4,579원, 사립 월평균 21,627원, 만 5세 국공립 월평균 4,799원, 사립 월평균 19,329원을 부담하고 있음

[표 I-11] 연도별 방과후 과정 교육비 평균(2020-2023)

구분	유치원수		만3세		만4세		만5세 이상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20년2차	4,863	3,577	3,870	26,608	3,939	26,404	3,991	25,946
2021년1차	4,898	3,424	5,072	24,218	5,166	24,020	5,269	23,669
2021년2차	4,916	3,421	5,114	24,044	5,176	23,935	5,289	23,546
2022년1차	4,900	3,268	4,694	21,573	4,817	21,550	4,890	20,687
2022년2차	4,904	3,262	4,626	21,725	4,800	21,539	4,843	20,626
2023년1차	4,831	3,126	4,579	21,627	4,766	21,606	4,799	19,329

주: 1) 연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기본경비'의 총 합계(월단위) 평균값을 계산함
 2) 평균값 = 교육과정 '기본경비'의 총 합계 / 유치원 수
 3) 국공립은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의 합임
 4) 사립은 사립(법인), 사립(사인)의 합임. 자료: 유치원알리미 홈페이지(<https://e-childschoolinfo.moe.go.kr/>)
 2020-2023년 방과후 과정 교육비(2023. 6.5. 인출).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2025.09.13.)

○ 유보통합에 대한 보안 사항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보통합에 대한 추진계획이 현 정부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보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선제적인 노력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 유보통합에 대한 국정과제의 세부적인 방향이 결정된 후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인구 소멸에 대한 대비이기도 함. 몇 년 동안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각 기관과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 방향으로의 추진이 요구됨

○ 급식비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약화

- 유보통합의 핵심은 유아의 평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나 급식비 지원을 위한 재정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 마련 책임 주체(도청 vs 교육청) 간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행정적 혼란과 함께 일선 현장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과 교육청은 자체 재정 확보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진행 상황을 밝히고, 이를 위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예산의 전용 또는 삭감을 통한 하향 유보통합은 지양되어야 하며, 급식비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존 지원금을 조정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하는 것은 ‘하향 유보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야 함. 따라서 한 기관의 예산을 축소해 다른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은 전체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며, 형평성 확보를 명분으로 전체 지원 수준을 낮추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오히려 유보통합의 철학에도 어긋날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급식비 지원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함
 - 강원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의 명확한 재정 분담 구조 설정
 -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의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비 확보 노력
 - 유보통합 특별사업비, 시군 지방비 등 다원적 재원 구성

○ 지역, 시설 특성을 반영한 급식비 지원 권장 단가 안 마련

- 급식 시행 유아의 연령, 메뉴(영아/유아), 급식 제공 횟수(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간식, 저녁 식사), 기관유형별 조리 시설 차이 및 급식 단가 등 세부 사항을 자세히 비교, 점검 분석할 필요 있음

○ 학부모 요구 차이를 고려한 제도 마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부모 요구 분석을 통한 차이를 분석·검토하여, 유아의 권리를 중심에 둔 실질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교육과 보육시설의 다양화

- 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여러 유형으로 설립인가 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단설·병설 유치원), 법인·사립 유치원 등의 유형이 있어서 지원 부서와 지원 체계, 지원금의 유형, 회계 항목의 상이점으로 단순 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 취원 연령이 어린이집은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유치원은 5세에서 7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령 대비 비용 산출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며, 민간 영역은 일부 학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항목이 지원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적은 편이나, 사립유치원은 전액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누리과정비를 제외한 비용을 전액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부터 1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부담금에서 지원금만큼 반환하고 있으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표준교육비·표준보육비 산출이 되어야 하며, 표준교육·표준 보육비는 국공립의 비용산출 기준이 되어야 함
- 현재 일부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견해가 달라 기존 10만 원 지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중단되어 보다 구체적인 합의점의 보완이 필요함
-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우선 시설 유형별 비용을 정확히 취합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임.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원아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공정하며, 이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
 - 첫째 시설 설립의 비용과 원아 대비 종사자의 수 반영
 - 둘째 교육시설의 지원 비교
 - 셋째 현실적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황 검토
 - 모든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에 조세 부담을 동등하게 담당하는 국민으로 한정된 국공립에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모든 원아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시사점

- 급·간식비 격차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의 급·간식비 항목이 서로 다른 구조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따라서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한 분석과 공정한 연구가 시급함
-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 유형에 따라 급식비 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식비의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과 유치원 표준교육비는 산출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통합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과정비 인상에 필요한 산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함.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8시간 교사 인건비와 조리원 또는 조리 보조원 4시간 인건비 기준을 포함하고, 오후 간식비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관점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가 필수적임

Ⅱ. 강원특별자치도 여건 및 현황분석

1. 여건 및 현황 분석
2. SWOT 분석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4. 정부 정책 및 관련계획 검토

1. 여건 및 현황 분석

가. 지역별 지원 현황 분석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시·도 현황

○ 경기도

- 지원 금액: 월 45,730원/1인이며 재원 구조는 교육청에서 단독 지원
-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액으로 보육 서비스 격차 해소와 단일 기관 재원 운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고소득 지역 특성상 세수 기반 안정적 예산 확보 가능

○ 인천광역시

- 지원 금액: 월 37,840원/1인, 교육청(50%) + 지자체(50%) 매칭 지원함
- 중간 규모 지원액으로 합리적 예산 분배 모델, 지자체-교육청 간 업무 협약(MOU)을 통한 체계적 협업, 도시-농촌 복합 지역 특성 반영한 유연한 정책 설계

○ 충청북도

- 지원 금액: 월 30,000원/1인, 교육청(60%) + 지자체(40%) 단계적 분담하고 있음
-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최소 지원액 기준 설정 및 지자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부담을 조정, 농촌지역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집중

○ 전라북도

- 지원 금액: 월 20,000원/1인, 교육청(70%) + 지자체(30%) 조건부 지원
- 지역 재정 취약성 반영한 보수적 예산편성, 농어촌 소규모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급식비 절감을 위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연계

○ 부산광역시

- 지원 금액: 월 15,800원/1인, 교육청(80%) + 지자체(20%) 최소 분담
- 전국 최저 지원액으로 지역 내 보육 불평등 논란, 대도시 특성상 외부 식자재 유통비용 상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 밀집 지역에만 추가 보조금 지급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금액: 월 24,300원/1인, 교육청 단독 지원(매칭 제외)
- 도내 제도에 따른 행정 자율성 반영 및 관광지 특성상 급식비 외 추가 복지 프로그램 병행과 해양 수산물 공급 망을 활용한 급식비 효율화 전략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 금액: 월 24,300원/1인, 교육청 단독 지원(매칭 제외)
- 산간 지역 특성상 농산물 자체 조달 시스템 구축과 겨울철 식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비한 예비비 적립 및 소규모 마을공동체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표 II-1]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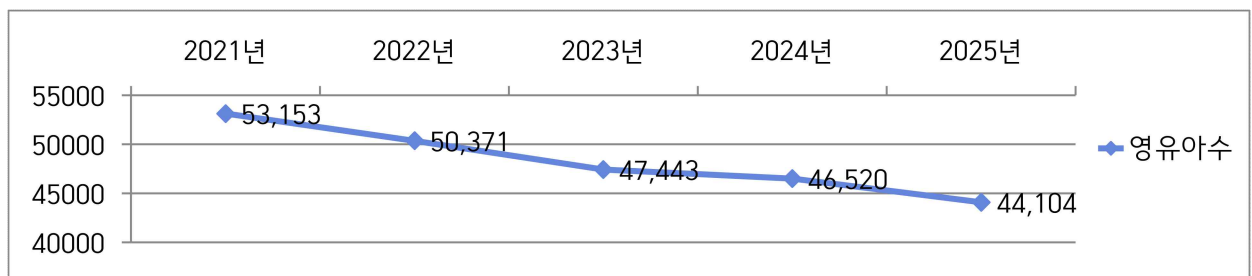
어린이집 누리반(3~5세)급식비 지원 (시, 도)							
지역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부산	제주	강원
지원	45,7	37,8	30,0	20,0	15,8	24,3	지원 없음
매칭	교육청 전액	교육청(50%) 지자체매칭(50%)	교육청(60%) 지자체매칭(40%)	교육청(70%) 지자체매칭(30%)	교육청(80%) 지자체매칭(20%)	교육청 지자체매칭	

출처 : 2025 강원어린이집 연합회

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육 여건 및 현황

■ 영유아 현황

- 초저출생에 따른 생애 초기 공적 투자의 중요성 강조
-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대상 영유아 지속 감소



[그림 II-1] 2025년 영유아 현황

- 도내 0~5세 영유아 2021년 대비 17.02% 감소
- 시군별 영유아 대상 지원사업 차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발생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사업 추진 차이로 교육격차 가속화

- 이원화된 행·재정 지원 체계로 인한 유보통합 공감대 형성 어려움
- 지역 여건에 따른 향후 지원 방안
 - 지속적인 영유아 감소에 따른 소규모 기관 지원 방안 모색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 교육사업 추진으로 교육격차 완화 도모
 - 도 교육청 주관 교육사업 추진 시 시·군간 차이 단계적 완화 고려

■ 어린이집 현황

- 국공립 166개소 중 공유재산 80개소, 무상 임대 65개소, 장기 임차 17개소
- 설립 별 개소 수(%): 민간(29.52) > 가정(28.39) > 국공립(20.35) > 사회복지법인(11.43) 순
- 전년 대비 3개소(국공립 2, 직장1), 감 33개소(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6, 민간 11, 가정 13)
- 미 운영 어린이집(현원 0명) 18개소

[표 II-2] 2025년 어린이집 현황(2025. 4. 1 기준)

(단위: 명, %)

구분	정부지원			정부미지원				계	증감률 (전년대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시설수	166	92	24	228	220	2	56	788	△30(-3.63)	
아동수	정원	9,907	6,556	1,249	13,957	4,317	50	4,138	40,174	△1,561(-3.74)
	현원	6,932	2,775	515	8,318	2,666	33	3,058	24,297	△1,853(-7.09)
	총원률(%)	69.97	42.33	41.23	59.60	61.76	66.00	73.90	60.48	(-2.22)
종사자	인원	2,094	937	213	2,539	1,407	10	945	8,145	△220(-2.63)

■ 유치원 현황

- 시설 현황
 - 2022년: 64개소, 2023년: 65개소, 2024년: 66개소로 매년 약 1.5% 씩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치원 시설의 안정적인 확충을 보여줌
- 원아 수 및 충원율
 - 2022년: 13,168명, 2023년: 12,681명, 2024년: 12,440명, 2023년 3.7% 감소, 2024년 1.9% 감소 등 원아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와 맞물린 현상으로 보임

- 특히 2023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24년에는 감소율이 완화되었으며 이는 출생률 감소와 맞물린 결과로 보여 지고 있음

○ 종사자 수

- 2022년: 1,384명, 2023년: 1,480명, 2024년: 1,469명으로 2023년 6.94% 증가, 2024년 0.7% 감소 등 종사자 수는 2023년에 크게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함
- 이는 교직원 수급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

- 시설 수는 매년 약 1.5%씩 증가하며, 유치원 시설의 안정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맞물린 현상으로 보임. 종사자 수는 2023년에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교직원 수급의 불안정성을 보임

[표 II-3]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현황(2025. 4. 1 기준)

구분	2022	2023	2024	증감률(전년대비)
시설수	64	65	66	△1.5%
원아수	13,168	12,681	12,440	▽ (2023, 3.7%) ▽ (2024 1.9%)
종사자수	1,384	1,480	1,469	△(2023,6.94%), ▽ (2024,0.7%)

■ 취약 보육 현황

- 장애아 전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일반 영유아 수 제외
- 장애아 전문: 하나(춘천), 예찬(원주), 빛나라(강릉), 꿈나라(삼척)
- 방과후 통합: 동해(동해), 삼척(삼척)

[표 II-4] 취약 보육 현황(2025. 4. 1. 기준)

					(단위: 명, 개소)	
구분	기관 수	학급 수	영유아 수	보육교직원 수	기관수 증감률 (전년대비)	
영아전담	10	70	298	131	-	
장애아전문	4	37	106	57	-	
장애아통합	27	40	119	40	3(12.50)	
방과후통합	2	-	-	-	△1(-33.33)	
그밖의 연장형	야간연장	109	66	290	66	△3(-2.68)
	24시간	1	-	-	-	-
	휴일보육	10	-	41	8	3(42.86)
계	163	213	854	302		

[표 II-5] 법인(사회복지, 단체)어린이집 현황(2025. 4. 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총계
	단독	복합	계	사단법인	재단(종교)법인	단체	계	
2024년	85	9	94	1	16	12	29	123
2025년	83	8	91	1	15	7	23	114

※ 법인어린이집 감9개소(사회복지법인 감3, 종교법인 감1, 단체 감5)

[표 II-6] 규모별 영유아 재원 현황(2025. 4. 1.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이상~20인 미만	20인 이상~50인 미만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150인 미만	150인 이상	계
2024년	125(15.10)	251(30.40)	280(33.90)	157(19.0)	9(1.10)	4(0.50)	826(100)
2025년	147(18.47)	230(28.89)	271(34.05)	135(16.96)	8(1.01)	5(0.63)	796(100)

※ 전년대비 10인 미만 기관 22개소(3.37%) 증가

■ 일반 현황 분석

- 도내 어린이집 796개소 중 민간어린이집의 개소, 영유아, 보육 교직원 수 가장 많음
- 취약 보육 관련 영아 전담 10개소, 장애아 전문 4개소(106명), 장애아통합 27개소(119명)
- 도내 정원 충원율이 평균 60.48%이며, 10개 시군이 도전체 충원율보다 낮음
 - 동해(57.04%), 태백(51.88%), 삼척(51.78%), 홍천(50.27%), 횡성(46.39%), 영월(48.37%), 평창(56.81%), 정선(33.83%), 철원(57.14%), 화천(57.44%)
 - 10인 미만 147개소(18.47%), 20인 미만 377개소(47.36%), 50인 미만 648개소(81.41%)
- 공유재산 총 167건(육아종합지원센터 4건, 직장어린이집 5건, 국공립 81건, 통학버스 33건, 장난감도서관 22건, 실내 놀이터 22건)

2. SWOT 분석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내부 환경</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외부 환경</p> </div>	<p>강점 (Strength)</p>	<p>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우수성과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 강원특별자치도는 출산율감소에 대한 사회변화대응을 강원형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 • 유보 통합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관련 지자체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영유아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제약과 한계가 존재함 • 영유아의 성장을 위한 생애초기 교육과 장기간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관리대응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미비 • 지역적 한계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27년 유보통합을 고려중이나 관련 인프라 및 현장의 이해 부족
<p>기회 (Opportunity)</p>	<p>S-O 전략</p>	<p>W-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관리 체계의 점진적 구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예산지원, 운영 기준 및 인프라 및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단계적 해소와 형평성 강화를 고려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 제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 관심을 통해 관련 투자와 지원 강화 • 강원 지역 내 적용 가능한 우수한 우수사례 연구 및 관련제도 및 정책수립 노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복지부의 이원화된 기존 정책을 단일체제로 통합함으로써 예산집행과 행정절차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정책 고도화 및 실효성 강화 확산 • 지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현장 친화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 지역 특화된 제도 및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을 위한 통합형 유보통합의 단계적 차별성과 특성을 통한 지역 중심의 사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출산율감소에 따른 영유아 인구의 감소와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관계자와 지역민의 깊은 연계 및 소통을 통한 공동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기반 구축 •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강원 지역 특화된 체험형 유보통합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보육 브랜드 제고 •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현안과 문제에 근거한 핵심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개선을 위한 기반 상품 개발
<p>위협 (Threat)</p>	<p>S-T 전략</p>	<p>W-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지역의 유보통합 관련 제도 및 예산의 부족에 따른 지역 성장의 한계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예산 투자의 한계 존재 • 강원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급식비 및 간식비는 물론 예산지원 및 운영기준, 교사 처우 격차로 인한 아동 교육복지 형평성 저해 • 학부모의 부담가중 및 기관 간 서비스 질의 불균형 발생 및 고착화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유보통합관련 정책 및 제도의 통합과 관련 제도 도입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영유아 지원 관련 산업의 세분화 및 지역별 중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유아에 대한 보다 구체적 기반마련 • 예산, 교육, 환경, 대응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유보통합 생태계 기반 지역별 인프라 개발 확장 •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인프라와 유보통합 운영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보통합의 문화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관련 예산 및 인적, 물적 자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확보를 통한 지역특화 영유아 급·간식비 연계 집중적 투자지원 확대 • 교육복지 형평성 제고를 통한 지역별 유보통합 시스템 및 제도적 정착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제도의 한계점 극복 •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유아 교육 및 제도와 법률적 연구와 검토를 통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간 불균형 제고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법령

가. 급식 관리 운영

- 급·간식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집단급식소로 규정(동법 제2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무를 갖음(동법 제88조). 또한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라 준수되어야 함
- 국공립유치원과 매년 10월 공시 기준 원아 수가 5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으로 규정되며 「학교급식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급식을 관리·운영하게 되어 있음. 또한, 유치원은 식품 위생 관련된 사항을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리해야 함

[표 II-7]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 경비 기준 법령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기준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부담 원칙 -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 학교급식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설립·경영자는 보호자 부담 경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원칙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 보육사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

■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조리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를 따라야 함.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고 환기시설을 통해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함
 - 2) 식기는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함
 - 3)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건물을 공유하는 어린이집은 기 설치된 조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4) 직장어린이집 건물 내 조리 시설이 있는 경우, 영유아 음식의 조리 공간을 분리하거나 구획하는 경우 기설치 된 조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동법 제9조)

■ 유치원

- 유치원의 급식시설과 설비의 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며 조리실과 설비·기구, 식품 보관실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유아교육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의 기준에 따르며 학교급식법 대상인 유치원(국공립유치원 및 원아 50인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조리장, 설비·기구, 식품 보관실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의 시설기준은 매우 유사. 다만, 「유아교육법」은 「학교급식법」과 달리 급식 인원(100명)을 기준을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을 구분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에는 신발 소독장비 설치, 검수 구역 조명 기준 등이 추가되었고 급식 관리실, 편의시설, 식당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시된 것이 주요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규모별 적용 법령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되는 급·간식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어린이식생활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양하다. 기관 유형과 기관 규모(원아 수)에 따라 적용받는 법령을 정리하면 < 표 II-9>과 같음

[표 II-8]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 규모별 적용 법령

유형	규모	관계법령
어린이집	50인 미만	영유아보육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50인-99인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0인 이상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유치원	50인 미만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50인-99인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0인 이상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주: *국공립유치원만 적용. 원아 수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미적용.

- 주요 법령을 소관 부처에 따른 급식 관리·운영, 안전·위생, 건강·영양, 식생활 공급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II-9>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법령의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급식 관리운영과 안전·위생과 관련된 기준은 여러 법령에 걸쳐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함

[표 II-9] 소관 부처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 간식 관련 주요 법령

소관부처	급식관리·운영	안전·위생	건강·영양	식재료공급 및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법	어린이식생활법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
교육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법

다. 시·군 특색사업

○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장기근속 수당, 명절 수당 등),
-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특별활동비 등), 시군별 장난감도서관 운영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냉난방비, 차량 운영비, 차량 구입비, 교재교구비 등)
-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시설물 개보수 및 기자재비 지원, 그 외 현안 사업 등)
-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단합대회 참가 및 보수교육 여비 지급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춘천, 원주, 강릉)

○ 급(간)식비 비교

[표 II-10] 어린이집 급·간식 비교

(단위: 천원, 일 기준)

시 군명	지원단가	비고	시군명	지원단가	비고
춘천	650	월13천원	영월	850	월17천원
원주	675	쌀:175원(월 1kg) 유제품: 500원	평창	500	월10천원
강릉	600		정선	750	월15천원
동해	450	농업기술센터 지원	철원	260	인재육성과 지원
태백	2,000		화천	500	
속초	300	월6천원	양구	-	
삼척	124	월2,480원	인제	400	
홍천	-		고성	500	
횡성	167(0~2) 217(3~5세)	어사진미(쌀)지원 · 0~2세: 연10kg · 3~5세: 연13kg	양양	500	월10천원

출처: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2025.07)

○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현황

- 0~5세 영유아는 이용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급·간식비 차이 발생
- 유치원의 경우 <표준 유아 교육비>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2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원 한계 발생 및 절대적 지원 단가에서 차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시행 기준이며,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 이상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교육청마다 상이 하나, 무상급식비(급식 1회)는 1인당 평균 2,600원 지급하고 있음

○ 특별활동 비교

[표 II-11]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교

(단위: 천원, 일 기준)

시군명	연령	지원단가	비고	시군명	연령	지원단가	비고
춘천	2세	20	10개월 지원	영월	2세	30	10개월 지원
	3세이상	50			3~5세	80	
원주	2세	20	'25년 신규	평창	3~5세	50	
	3~5세	30					
강릉	0~2세	20		정선	3~5세	60	10개월 지원
	3~5세	50			학급당 10명 이하 어린이집 180천 원 추가 지원		
동해	1~2세	20		철원	1~2세	30	10개월 지원
	3~5세	50			3~5세	50	10개월 지원
태백	3~5세	50		화천	3~5세	50	
속초	1~5세	30		양구	0~2세	30	
					3~5세	50	
삼척	1~2세	30		인제	영아반	30	
	3~5세	50			유아반	50	
홍천	1~2세	60		고성	24개월 이상 영아	30	'25년 신규
	3~5세	80			3~5세	50	
횡성	만1세	22	'25년 10% 인상	양양	24개월 이상 영아	30	'25년 신규
	만2~5세	55			3~5세	50	

출처 :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2025.07)

○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비교

- 국비+도비+시군비 지원사업: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월 260천 원), 교사 겸직 원장(월 75천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월 110천 원), 정부미 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월 100천 원)
- 도비+시군비 지원 사업: 보육 교직원 명절 수당(100천 원, 연 2회),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월 40천 원), 장애아 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월 100천 원)

[표 II-1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비교

(단위: 천원, 일 기준)

시군명	내용	지원단가	비고
춘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70/90	3년미만/이상
	장애아전담(통합)보육교사 추가지원	40/50	보육/특수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지원	50	
원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70/90	2~3년/4~5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0	
강릉	보육교사 근속수당	30/50/70/100/150	3/5/7/10/15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추가)	50	담임교사
동해	교직원 평가 인증수당(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100(연1회)	담임교사, 원장
	어린이집교사 장기근무수당	50/100/150	2년/5년/10년
	명절수당 추가 지원(국공립 정규직 보육교직원) <도 명절수당 중복지원금 제외 후 지급>	기본급의 20% 또는 40%	벽지 40% 지원
태백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국공립·사회복지법인)	30/50/70	3~4년/5~9년/10년 이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민간·가정)	60/20/100	2~3년/4~6년/7년이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	40/50/60/100/150/200	2/3/4/5/10/15
속초	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담임교사 장려수당)	80	담임교사
	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안전관리수당 및 장려수당)	50	기타종사자
	담임교사 특별수당(겸직원장의 경우 75천원 제외)	200	
삼척	평가제 격려수당	500(연1회)	담임교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30/50/70	1/3/5
	정부미 지원시설 보육교사 근무수당 (평가인증 참여 민간, 가정어린이집)	50	보육교사
홍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50/100	2년/5년이상
	민간어린이집 근속수당 지원	50/70/90	6개월이상/ 2년/3년
영월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	30/50/70/100	1~3미만3~5미만/ 5~7미만7년이상
	명절수 당 추가 지원	100(연2회)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	50/70/100	2~3/3~5/ 5년이상
평창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최저임금준수 어린이집)	100(연2회)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복지포인트<타부서 지원: 복지정책과>	200/300(연1회)	1~3/3년이상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30/50/70/100	3/5/7/15
정선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0/40/50/70/100	2~3/3~5/5~7/7~10/10년이상
철원	명절수당 추가지원	50(연2회)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담임교사)	30/50	1년이상3년이상
양구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50/70/100	5/7/10
인제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	30/50/70/100	2/4/6/10
고성	정부 미지원 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30/50	0~3년/4년이상
	어린이집 운전기사 처우개선비	1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보육시설)	100(연1회)	6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자
양양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30/50	2년이상/3년이상

- 영유아보육법상 법정사무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사무 시군 간 차이 발생
 - 비용 보조 관련 사무(어린이집 기능 보강, 품질 향상, 인건비 지원 등) 도 및 시군 직접 추진
 - 도청 보육사업의 경우 18개 시·군청 지원을 위한 국비와 도비 사업 중점 추진
 - 시·군청 보육사업의 경우 국비, 도비, 시(군)비 특색사업 중점 추진
 - ※ 다른 법령에 따른 사무(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차이 발생
- 시군 특색사업의 경우 지역 간 지원 차이 발생
 - 급(간)식비 관련 영유아 1인당 124원~2,000원 차등 지원 ※ 미지원 지역: 홍천, 양구
 - 특별활동비 지원은 18개 시군 모두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 3~5세 지원 지역: 태백, 평창, 정선, 화천
 -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관련 18개 시군 모두 근속 수당 중심 차등 지원
 - ※ 일부 지역 교통 수당(춘천), 복리후생비(원주), 평가인증 수당(동해, 삼척), 복지포인트(평창) 등 지원
- 보육사무 중 교육·보육 과정 관련 사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 보육재정 분석

[표 II-13] 2025년 보육예산 현황(2025년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증감률 (전년대비)
①국비 보조	221,928,300	69,535,634	41,011,397	332,475,331	△6.05
②도 자체	-	52,915,816	-	52,915,816	△0.53
③도·시군	-	8,804,508	15,632,732	24,437,240	△7.56
④시군 자체	-	-	28,266,185	28,266,185	13.73
계	221,928,300	131,255,958	84,910,314	438,094,572	△4.43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52,161,398 천 원)은 도 자체 사업에 포함
- 이관 제외 대상인 부모 급여(영아 수당) 지원(86,488,691 천 원) 국비 보조사업에 포함
- 국비, 도비 보조사업 대응 투자 비율 초과 편성분은 자체 사업(시 군비)에 포함

■ 시·군 특수시책사업

○ 총괄

[표 II-14] 2025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수	예산액	구분	사업 수	예산액
춘천	13개 사업	5,576,468	평창	12개 사업	1,057,500
원주	17개 사업	5,136,456	정선	10개 사업	841,077
강릉	17개 사업	3,990,706	철원	10개 사업	733,739
동해	12개 사업	1,243,650	화천	15개 사업	830,056
태백	15개 사업	1,084,899	양구	8개 사업	414,490
속초	13개 사업	1,356,380	인제	13개 사업	962,166
삼척	16개 사업	1,533,912	고성	10개 사업	371,136
홍천	9개 사업	1,348,173	양양	9개 사업	294,700
횡성	14개 사업	597,336	합계	224개	28,266,185
영월	11개 사업	893,341			

[표 II-15]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㉑ 보육 지원	㉒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㉓ 인건비 지원	㉔ 취약 지원	㉕ 어린이집 운영지원	㉖ 환경개선비 지원	㉗ 교육 연수 등	㉘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㉙ 장년·갑 도서관 등	㉚ 기타*	합계
춘천	1,914,000	612,500	800,000	0	1,017,840	25,000	0	1,181,228	0	25,900	5,576,468
원주	1,336,000	813,960	74,520	2,367	1,565,500	140,500	5,600	1,074,489	100,000	23,520	5,136,456
강릉	1,549,000	165,000	553,176	71,330	691,500	80,000	15,000	174,000	674,900	16,800	3,990,706
동해	592,000	350,000	0	0	110,050	40,000	34,500	0	115,000	2,100	1,243,650
태백	228,000	147,600	61,201	113,920	348,128	56,000	17,000	0	109,000	4,050	1,084,899
속초	518,400	483,880	24,018	0	228,232	60,000	34,500	0	0	7,350	1,356,380
삼척	288,000	508,000	146,880	0	277,700	190,000	117,692	0	0	5,640	1,533,912
홍천	866,400	138,000	212,000	0	8,773	100,000	20,480	0	0	2,520	1,348,173
횡성	333,000	28,200	84,236	0	73,940	54,000	22,000	0	0	1,960	597,336
영월	276,000	99,600	194,450	182,071	92,000	20,000	21,000	0	0	8,220	893,341
평창	150,000	120,000	374,400	0	212,100	61,000	38,000	0	80,000	22,000	1,057,500
정선	124,200	60,600	298,800	0	80,220	250,157	25,000	0	0	2,100	841,077
철원	441,600	52,800	77,787	0	0	60,000	16,000	0	76,632	8,920	733,739
화천	170,000	52,800	479,406	0	99,850	0	24,200	0	0	3,800	830,056
양구	265,200	18,960	24,800	0	15,400	20,000	39,050	0	31,080	0	414,490
인제	492,600	79,200	0	0	163,888	156,478	70,000	0	0	0	962,166
고성	162,000	77,800	0	36,000	63,600	21,000	8,736	0	0	2,000	371,136
양양	131,880	43,200	55,320	0	58,800	0	5,500	0	0	0	294,700
합계	9,838,280	3,852,100	3,460,994	405,688	5,107,521	1,334,135	514,258	2,429,717	1,186,612	136,880	28,266,185

※기타는 일반운영비 성 경비(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업무 추진 여비, 사무관리비)

○ 이관 제외 사업 현황

- 【국비 사업】 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전액: 86,488,691천 원
- 【도비 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교육재정) 전액: 52,161,398천 원
- 【시군 자체 사업】
 - (횡성)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예산액: 5,000천 원, 사업 대상: 사립유치원)
 - (영월) 특별활동비 중 일부(예산액: 100,000천 원, 사업 대상: 사립유치원)
 - (철원) 어린이 상상 놀이터 운영(예산액: 25,000천 원, 사업 대상: 초등학생)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관련 배경 및 문제 제기

- 영유아기 식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은 공공 급식 정책 대상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임
- 양질의 식사와 간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급식과 간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 급·간식 관련 적용받는 주요 법령 등이 다름
- 소관 부처가 다르기에 급·간식비 재원과 지방자치단체별, 시도교육청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을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의 내실화를 공고히 하여 급·간식을 제공받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대로 섭취하면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급·간식비 관련 시발점과 항목이 그간 변화하여 현장에서 차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존재한 것도 사실임

■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 마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에는 영유아 대상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 및 필수 조리 배식기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급식 시설·설비개선 매뉴얼과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시설과 설비개선 매뉴얼이 제작될 필요가 있음. 매뉴얼 제작에 앞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시설과 설비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함

- 조리실은 위생과 안전을 위한 동선 확보 및 조리 기구 배치가 필요한 장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조리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초등학교 급식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체격에 맞지 않는 식탁과 의자 사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급식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시청, 교육청 지도점검과 합동점검, 평가제, 부모 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성과 평가와 지도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 스마트 행정을 통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완화하면서 급·간식 환경의 위생과 안전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교육(지원)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모니터링 전문가, 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위생·안전, 영양 및 급·간식 관리 실태를 상호 점검하면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급·간식 지원 단가 현실화

- 보육료에서 급·간식비 분리 검토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차별 없는 바른 먹거리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 운영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 설정과 운영 검토가 필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간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어린이집도 적정 급·간식비를 보육료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급·간식비 내역 및 운영이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반영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항목 조사와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확인이 필요함

-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 방안(교육부, 2023)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 지침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유형별 유치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보완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4. 정부 정책 및 관련 계획 검토

가. 정부 123대 국정과제

- 2025년 6월 출범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하에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
 - 보건·복지·교육과 관련된 국정 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8개 부문으로 분류해 37개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음
 - 교육과 관련된 전략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에서 [국정 101]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로 발표됨

■ 대통령 공약

- 유아·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 확대
 - 그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발생
 -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 공약 취지
 - 출발선 공정: 만 5세(초등 입학 직전) 학습·정서 격차를 조기에 완화
 - 돌봄 공백 해소: 맞벌이·1인 가구 증가로 보육·교육 품질과 시간 확장 수요 증가
 -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유아·초등 초기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 질 제고 → 장기 생산성 확보
 - 가계 교육·돌봄 부담 경감: 실질 가처분 소득 확충 및 합계출산을 방어
 - 교육·보육 이원 구조(유치원 vs 어린이집)로 인한 행정·서비스 단절 완화

○ 현행 제도 (2024 기준 일반적 구조)

- 만 3~5세: 누리과정(교육·보육 공통 과정) 정부 지원(교육비·보육료 기본 지원 + 추가 방과후 반,연장보육 차등), 만 0~2세: 영아 보육료 차등 지원(소득·시간)
- 책임 주체: 교육부(유치원) +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담
- 문제점: 기관유형별 지원단가·추가 프로그램 격차, 교사 처우·근무 환경 차이 → 품질 변동, 만 5세 학제 연계(초1 적용)프로그램 불균등, 저소득·농산어촌·다문화 아동의 질 높은 프로그램 접근 격차, 부모 실질 부담(사교육·특성화·연장시간) 잔존함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외 사례

○ **핀란드** :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체계를 운영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이 거의 없음. 모든 아이들은 동일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비용이 차등 적용되며 이는 격차를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 통합된 기관 운영: 핀란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라는 이름 아래 통합된 체계를 유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동일한 커리큘럼과 목표를 공유하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공평한 접근성: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음. 부모의 소득에 따라 비용이 차등 적용되지만, 이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 교사 자격 기준: 유아교육 교사는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받으며, 대부분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의 자격 격차가 없고, 동일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됨
- 사회적 격차 최소화: 핀란드의 시스템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적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이 없으므로, 부모의 선택이나 경제적 여건이 아이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독일** : 어린이집(Kita)과 유치원(Kindergarten)이 별도로 운영되지만, 공공 지원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격차가 크지 않음. 특히,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으로, 유치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구조

- 독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공공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두 기관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음

- 비용 부담 완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용이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 가정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이에 따라 경제적 배경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차이가 줄어듦
 - 질적 표준화 : 독일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돌봄 품질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교사 자격 기준과 시설 조건이 엄격히 관리되며, 모든 아동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동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은 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아동과 부모 모두 큰 부담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이동 과정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됨
- **영국**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비용과 프로그램 질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공립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3~4세 아동에게 무료 교육 시간을 제공하며, 보육비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무료 교육 시간 제공: 만 3~4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 또는 30시간의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줌.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에서도 무료 교육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보육비용 지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 Tax-Free Childcare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보육비용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 모든 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교육 및 돌봄 품질을 유지하도록 규제
- **미국**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며 유치원은 주로 공립으로 운영되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린이집은 사립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듦
-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 **일본** : 유치원(교육 중심)과 어린이집(보육 중심)을 별도로 운영하던 체계를 최근 통합하여 “인정 어린이원“이라는 제도를 도입. 이를 통해 부모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격차를 줄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외국 사례를 알아보면 외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 운영, 정부 지원 확대, 비용 차등 정책 등을 시행하며,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유보 현황 및 향후 과제

유아 교육과 보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는 총 6개로, 이는 유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향후 과제의 도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에 근거하여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갖는 특성과 차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6]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구분	유보격차 현황	향후 과제
행정/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복지부 이원, 데이터, 재정, 평가 코드 표준화 미완 ·교육청 vs 지자체 분리로 중복 점검·서류 부담 ·일부 지역 원스톱 상담·전환(매입·공동 운영) 시범 ·국공립/전환·매입형·민간 혼재 → 통합운영 기준 요구 증가 ·규정 준수 중심 문화, 성과(KPI) 관리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통합 로드맵(데이터→재정 분류→품질→법) 명문화 ·공통 분류체계(Codebook) 전산적용(재정,인력,질,시설유형) ·지역통합지원센터(행정+포용+심리+수요예측) 확충 ·KPI기반 책임 거버넌스(질향상, 행정부담 감축) ·전환·매입형 표준 운영 매뉴얼(재정,인사,모니터링), 통합 시나리오 영향평가 정례화
규제/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장학·컨설팅 / 어린이집: 평가,점검 중심 이원 절차 ·기능 유사하나 지표·주기 상이, 결과활용 제한적 ·디지털 관할·서류 경감 파일럿 초기 ·안전·위생·아동 권리 서류 중복 → 행정부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공통 질 프레임(구조, 과정, 포용, 정서, 안전, 가정연계) ·단일순환 품질주기(자가진단→관찰→코칭→재측정) 2~3년 ·위험기반 차등 점검(사건·민원,이직,취약지표 연동) ·질 플랫폼(관찰기록,코칭매칭,대시보드) + 윤리지침 ·질 결과-지원-재정 인센티브 연계 모델 ·포용·정신건강·행동·언어환경 지표 고도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시간대(연장/야간)·포용반 교사 부족, 총 수요 둔화 ·교원 자격 vs 다경로 보육 자격 → 초기 역량 격차 ·국공립 처우 수렴, 민간 임금·안정·휴게 준수 불균형 ·연수 시간 채우기 중심,경력,역량연계 낮음 ·소신·정신건강 문제, 디지털 역량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브리지(보육→교원),역량 인증 도입 ·표준 1년 Induction: 멘토링·수업,놀이 영상피드백 규정 ·경력다경로(수업전문/포용·행동,언어·정서,디지털,질코치,수석) ·임금:기본급+역량등급+취약,연장 가중치+질개선 인센티브 ·행정경감 패키지(자동화 서식·공동행정센터·보조인력 기준) ·정신건강 스크리닝,상담 바우처,고위험 기관경보 ·AI 수요예측 기반 순회, 파견풀 운영
접근성/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세 이용률 OECD 상위, 0-2세 지역·시간편차 ·도시 과잉좌석 vs 농산어촌 축소·폐원증가 ·연장,특새,야간,장애,다문화,의료적 지원 좌석 부족 ·국공립 비중 상승, 질 균질화·민간 구조조정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기반 재배치(저이용 통합,다기능 허브 전환 지원) ·이동/순회 특수,언어,행동,심리 서비스 팀 확충 ·실시간 좌석·연장·포용 정보 통합 플랫폼 ·취약지역 가산(임대,주거,교통,인력 인센티브) ·친환경·안전 리모델링 펀드 및 통합 인증 ·시간제·부분 이용 '공유 슬롯' 제도 도입
서비스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립·운영시간·포용 여부 따라 상호작용·놀이 질 격차 ·구조적 질 일부 개선, 과정(상호작용·정서) 개선 더딤 ·서류 대응이 개선 시간 잠식, 다학제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지표 세트(구조·과정·포용·정서·안전) 법제화 & 기관 대시보드 ·실시간/지연 영상 코칭(비식별·AI 보조) 확산 ·다학제 순회(언어·행동·심리) 표준 배치비율 설정 ·질 개선 성장을 인센티브(절대 점수 의존 축소) ·1회 입력 다중 활용(API) 서류 간소화 ·과정질·아동 발달·참여·정서 지표 연계 분석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리과정 공통 과정으로 격차 일부 완화; 국가수준 공통 커리큘럼 수행 논의·지원 부족; ·표준보육과정과 연계성 보완 필요; 누리과정 개정 진행; 교사 커리큘럼 수행력 편차;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과정 연계 미흡; 출발선 평등 자료·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초등 저학년 연계 -지도체계; 연령 연속성 중심 '경험 영역' 매·평 가이드; ·수행 역량 기반 교사 연수(관찰→피드백→리플렉션 사이클); 0-2세 놀이·상호작용·핵심 기대수준(Departmental Benchmarks) 공개·언어, 정서, 실행기능 조기지원 패키지(자료+가정연계); 출발선 평등 위한 다문화·취약 유아 맞춤 스타터 키트 및 디지털 자료 플랫폼 구축

- 첫째, 통합 로드맵’은 선언이 아니라 연차별 마일스톤(예: 1년 차: 공통 Codebook/식별자 적용, 2년 차: 단일 품질 주기 시범, 3년 차: 재정·인력 지표 KPI 연동, 4~5년 차: 통합 법체계 입법)과 실패·이행 리스크관리(지연 시 보정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실행력을 가짐. 데이터 레이크와 기관 대시보드는 단순 집계 아니라 질 개선 ‘행동(코칭 참여)→중간 지표(상호작용 점수)→결과(아동 참여·정서 안정)’의 인과 사슬을 가시화하는 ‘러닝 시스템’이 되어야 함
- 둘째, 질 관리 패러다임은 ‘일괄 평가-등급-행정 제재’에서 ‘상시 자기진단-관찰 증거-코칭
 - 성장률 인센티브’로 전환됨. 위험 기반 차등 점검을 도입하면 평균적 기관의 서류·준수 부담을 줄여 교사 시간의 구조적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남은 행정 역량을 취약·고위험 기관 집중 지원으로 재투자 할 수 있음
- 셋째, 교사·보육 인력 정책은 단기 충원보다 ‘브리지·Induction·역량 등급·다경로 경력·정신건강 세이프 넷’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특히 질 개선 인센티브는 절대 점수보다 ‘기관별 향상률+취약 아동 비중 가중치’를 포함해야 형평성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함. 행정 경감(디지털 자동화+공동행정센터)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떤 연수·코칭도 효과가 희석됨
- 넷째, 인구 급감·지역 불균형 국면에서 시설 공급을 유지·확대하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질 집중을 떨어뜨림. 저이용 시설의 ‘다기능 허브(돌봄+포용지원+가족 서비스) 전환’, 순회 다학제 팀 확충, 실시간 좌석·포용 정보 플랫폼 구축은 ‘공급 총량 논쟁’을 ‘정밀 접근성 관리’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임
- 다섯째, 서비스 과정 질을 향상하는 디지털 도구(관찰·영상 코칭·AI 보조)는 ‘윤리·프라이버시 프레임+비식별 표준+동의 관리’ 없이 확산하면 반발과 시행 중단 리스크가 큼. 초기에는 제한된 코호트(자발 참여 기관+멘토 코치 풀 연계)로 성과(업무시간 절감률, 상호작용 질 점수 향상)를 명확히 인증해 확산 근거를 축적해야 함
- 여섯째, 커리큘럼 측면에서 ‘연령 연속성’과 ‘출발선 평등’ 두 축이 동시 추진되어야 함
 - 0-2세 핵심 상호작용·놀이 기대 수준(Developmental Benchmarks)을 누리과정 경험 영역과 매핑하고, 초등 저학년 기초역량(언어·정서·실행 기능) 조기 지원 패키지를 가정 연계 자료와 통합하면 유입 격차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결론 :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의 유보 격차 해소 전략은 ‘한 번에 큰 통합’이 아니라 데이터·품질·인력·재정·법의 계단식 동조(synchronization)에 기반한

학습형 체계로 진화하는 과정이므로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행속도, 윤리·수용성 확보를 균형 있게 다룰 때 지속 가능한 질 향상과 형평성 달성이 가능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함

- 첫째, 유보 격차 해소 방안의 추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한 자리에 놓고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양적 격차 외에 서비스 질과 교사 전문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웰빙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자료가 필요함
 - 이러한 자료와 증거에 기반한 논의와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둘째, 전국 평균 지표 외에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지자체별 접근이 필요함
 - 전국 수준의 포괄적인 정책의 설계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제한 점을 파악한 차별화 된 접근과 전략이 필수적
- 셋째, 유보 격차에는 양적·질적 격차가 공존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근원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양과 질의 격차가 정책적으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관, 교사, 영유아, 인프라 등의 양적 차이와 증감의 양적 추세 변화를 고려 하면서 질과 내용에 대한 격차 완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유보 간 격차가 지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 향상을 이끄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유보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균등화’의 전략이 필요함

■ 어린이집 영아(0~2세) 급간식비(급식비)

- 유보통합은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유치원(교육청 체계)과’ 어린이집(지자체·복지 체계)’의 제도·재정·관리·품질 기준을 하나의 공통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ECEC) 체계로 일원화하려는 국가 중장기 개혁임
- 선도교육청 사업은 이 전환을 앞서 시험(파일럿)·모델화·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전국 확산의 근거(데이터·성과)를 마련하는 시험대 역할을 맡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임. 현재(전통 구조) 이원화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관장 부처 이원화: 유치원(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자체) → 정책·지도·평가 기준상이
 - 재정지원 방식 차이: 유아 학비 vs 보육료, 특정 연령·시간대별 지원 격차, 추가 부모 부담 항목(특별활동·급식 등) 차이

- 교사 자격, 근무조건 편차: 유치원 교사 vs 보육교사 양성·임금·근속·근무시간은 물론 ·방학 등 다양한 요건과 구조가 다름
 - 품질·안전·평가 지표 이중: 평가인증(보육) vs 교육과정 운영평가(유아교육)
 - 행정·정보시스템 중복: 온라인 입학, 대기, 아동 출결, 급·간식 관리, 인력 통계 등 별도임
 - 학부모 경험 복잡: 동일 연령 자녀라도 기관 선택에 따라 운영시간·지원금·추가 비용·교육·돌봄 질 불균형
 - 지역 형평성 문제: 지자체 재정 여력·교육청 정책 차로 아동 환경 격차 확대
→ 저출생·여성 경제활동 확대·돌봄 공공성 강화 요구 속 ‘효율+형평+품질’ 제고 필요성이 누적
- 이에 도 교육청은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법」에 보육사무(어린이집)를 교육청 사무로 명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도의회 등은 교육청도 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교육자치법」개정 없이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함
- 위 건에 어린이집 영아에게 급식비 지급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①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및 선도교육청 선정 결과 등, ②만 3세 미만의 영유아 급식비 예산편성 및 집행 가능 여부 검토 순으로 살펴보았음

[표 II-17]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급식비 지원 내용

시기	유보통합 추진 경과	급식비 지원내용
'23.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 위원회 및 단 출범- ('23~'24) 유보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교육청은 「유아교육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시달하여 급간식비 등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유특회계 외 교육청 ·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
'23.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 계획 (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비 격차 완화의 세부 운영안에 유아(만 3~5세)가 다니는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따라 급식비 등 지원 수준이 다른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으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23.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 - 영유아보육 업무를 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중앙·지방 순차 이관 관리운영비: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위생관리, 보육교직원 복리비, 영유아 복리비, 사무집기 등자산취득비용*, 교사휴게실 유지비*, 급식기구확충**, 부모교육비용**, 방송수신우편요금 등 기본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현을 목표로 제시한 10대 정책 중 4번째 정책에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급 간식을 제공 표준 공통 운영 경비- 공공요금- 학생 복리비

- “유보통합 추진 방안” (’23. 1월)에 선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여건에 따라 지원항목을 발굴하여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계획” (’23. 3월)에 어린이집 유아(만 3~5세) 대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원으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23.7월)에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급식비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의 [표 II-18] 같이 어린이집만 3세 이상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고, 만 3세 미만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과정에 드는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

[표 II-18]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등 예산편성에 대한 회계별 구분 현황

구분		회계별 현황
만3세 이상인 영유아 대상	교육부장관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에 드는 보육비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까지)
	교육부장관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지원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대상	무상 보육 과정에 드는 비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정책을 고려할 때도 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해 급식비 없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만 3세 미만인 영유아에 대한 급식비 등 무상보육 과정에 드는 보조금법 시행령(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등에서의 공통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지원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음
- 도교육청은 만 3세 미만의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를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없으나,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보육 과정 중 급식비 지원 등의 비용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도가 부에 보조금 예산

을 신청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 일반회계(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예산액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

- 수요자 부모와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유보 격차 해소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난 연구들을 통해 드러난 유보 격차 해소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보면(1순위 응답), 정부 지원 증가와 부모 부담 완화에 대한 비용 지원에의 요구가 34.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으로 교사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23.3%로 큼(이미화 외, 2013)
 - 양육·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체계의 수립뿐 아니라, 교사 자격 강화와 전문성 향상,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수요자인 부모들 사이에서도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 간, 공·사립 간 부모 부담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과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II-19]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구분	이용 가능 연령	부모 비용 부담	정부 지원 금액	방학 유무	이용 시간	교사 자격 기준	교사 처우 수준	교사대 영유아 비율	지도 감독 체계	시설 설비 기준	무응답	계(수)
전체	9.2	16.7	17.7	8.6	5.4	14.9	8.4	4.9	7.8	6.2	0.3	100.0 (1,500)
유치원	7.8	15.7	17.6	10.1	4.3	18.5	7.5	4.8	8.9	4.6	0.1	100.0 (500)
어린이집	9.9	17.2	17.7	7.9	5.8	13.2	8.8	4.9	7.3	6.9	0.3	100.0 (1,000)

자료출처: 이미화·최윤경·유해미·이혜민(2013). 보육·유아교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 연구

-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집에서 다니기 편해서라는 ‘접근성’ 응답이 약 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장, 교사 자질의 우수성 37%, 프로그램 질의 우수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에게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접근성’, ‘교직원’, ‘프로그램의 질’ 등임을 알 수 있음
 - 기관유형별로, 공립유치원은 비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44.1%),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에 대해서는 공·사립유치원 모두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 되었음
 - 사립유치원은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49.6%), 비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국공립 어린이집(법인/직장 포함)은 시설·설비와 급·간식비용에 대한 선택 동기가 많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은 집에서 다니기 편리함과 급·간식의 질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 가정어린이집은 접근성과 원장·교사의 자질, 이용 시간과 급·간식의 질, 영아수의 적절성 측면에서 긍정 응답이 많은 반면, 프로그램의 질과 시설·설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별로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는 가운데, 유형별로 충족되는 수요에 차이가 존재함(이미화 외, 2013)
- 유보 전문가와 지역의 담당 공무원에게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전략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법·제도, 예산 및 주무 부처의 통합(20.8%)을 우선 전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그다음으로 교사 통합(15.3%)이 중요한 과제로 응답 되었음
- 특징적인 것은 현행 이원화 체제 유지 응답이 5.5%로 나타났으며, 민간과 사립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국공립화의 선행(4.2%), 영유아 위주로 생각하는 인식과 접근의 전환(3.8%) 등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들이 나타남
 - 유아교육과 보육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교사와 영유아 위주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함(최윤경 외, 2016)
- 부모와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공무원이 바라보는 유보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된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음
- 부모의 요구: 부모들은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부모 부담 완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요구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교사의 자격 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23.3%로 나타남. 이는 양육 및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이 부모들에게도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줌
- 정책적 접근 필요성: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는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유아 교육과 보육, 공립과 사립 간의 부모 부담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처우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
- 기관 선택 요인: 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접근성(43%), 교직원 자질(37%), 프로그램의 질(30%)이며, 기관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
 - 공립유치원: 비용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사립유치원: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다는 응답, 가장 많았으나, 비용 적절성 응답, 상대적으로 적음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설비, 급간식, 비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음
 - 민간어린이집: 접근성과 급 간식의 질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음
 - 가정어린이집: 접근성, 교직원 자질, 이용 시간, 급 간식의 질, 영아 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프로그램의 질과 시설·설비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음
- 전문가와 공무원의 통합 전략: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전략에 대해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법·제도, 예산 및 주무 부처 통합(20.8%)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교사 통합(15.3%)이 주요 과제로 나타남
 - 특히, 현행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5.5%로 소수에 그쳤으며, 민간 및 사립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국공립화(4.2%), 영유아 중심의 인식과 접근 전환(3.8%)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 제시됨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영유아 중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이를 통해 유보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

Ⅲ.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 실현 계획 및 해외 사례

1. 유보통합의 선도교육청 사업분석
2. 정부의 5세 무상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실현계획
3. 유보통합의 주요 해외 사례

1. 유보통합의 선도교육청 사업 분석

가. 개요 및 추진 체계

-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시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 대음,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교육청 9개 지역교육청이 선정되었음
 - 23년 10월 기준, 충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6개 시도교육청이 추가되어, 총 15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업을 분류하면, 지원 격차 완화(급식비 지원, 유아학비 경감), 돌봄 확대(거점형 방과 후 과정 운영, 방과후 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발달지원(장애 영유아 조기진단 지원, 영유아 발달검사·전문 기관 연계 등,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공동 교육과정 운영, 안전 체험교육, 유아 체험활동 지원), 교사·학부모 역량 강화(교사 역량 강화 지원, 학부모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안전 환경 조성(안전한 교육 돌봄 환경 조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역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을 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개요】

원칙	운영 분야	대상	적용범위	선정규모
① 국민안심	■ 급식비 격차 완화	어린이집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 교육청
	■ 유아학비 경감	유치원		
	■ 방과후 과정비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내 3그룹 이상	45개 교육청
	■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시·도 내 20개 기관이상	2개 교육청
	■ 안전환경 조성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② 다양 ③ 자율 ④ 지역중심	■ 시·도교육청 제안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시·도 자율	심사 후 선정

나. 시도교육청 지역 단위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표 III-1] 선도교육청 사업 수행 기반 유보통합에 대한 지역별 현안

구분	시도교육청 지원 내용
서울	- 법령과 조직, 인력 및 정비 지침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유보통합 추진 지침 및 인력 지원
부산	- 이관 대상 공통 업무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 제공 - 충분한 국가정책수요 인력(정원) 반영 / 유보통합 업무 표준 가이드라인 제
대구	- 자치단체 보육예산 지속적인 지원 방안 / 이관을 위한 공통업무 매뉴얼 마련 - 자치단체 전입 및 파견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인천	-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아 학비(보육료), 무상교육비 등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 확보
광주	- 지역단위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 제공 - 예산, 재원,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 필요
대전	- 실무 통합 운영을 위한 추진 인력(지역교육청 포함) 사전 확보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필요
울산	- 중앙정부에서 시도, 구 군청, 읍면 행정센터 및 예산/비예산 수반 업무 파악 필요 - 조직 구성의 예시 필요 /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 충분한 인력 필요(총액인건비 상향, 유보통합 인력 별도 충원)
세종	- 국가정책 수요 정원 반영 및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공문) 시행 - 지자체의 예산·기능 이관, 정원 이체 협의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해소 지원 - 보육 정책 분석, 추진 업무 파악 등을 위해 지자체와의 공동 워크숍 필요
경기	- 유보통합은 국가 시책 이므로 유아교육과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정책기획관 등 핵심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협력 도모 - 지역에서 도청과 시 군청의 협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내하고 협조할 내용을 명시하여 공문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 강구 - 교육부의 진행 과정을 시도교육청, 시도 교육감, 부교육감 등과 소통을 통한 공유
강원	- 지방 업무 이관 준비를 위한 도 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전담팀 인력 추가(순증) 필요- 2024 시군 보육업무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인력배치 및 업무이관 처리 안내- 지방단위 업무 이관 시 도 및 시군의 자체사업 이관 범위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 및 법률 근거 명시 필요
충북	- 일정보장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 유보통합을 위한 별도 인력 및 예산 지원- 유보통합 국가 정책수요 반영분 순증이 아닌 별도 인원으로 산정 필요 - 유보통합을 위한 격차 완화 예산 지방교육재정 예산 총당안 개
충남	- 재정과 인력 통합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법 마련-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한 모델 생성(유치원교사의 신분보장과 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격한 신분변동 지양)
전북	- 인력충원 요망 중앙으로부터의 지자체인력 충원에 대한 인센티브 반드시 필요 - 유보통합의 절대성에 대한 홍보
전남	- 인력 지원, 중앙 단위 명확한 업무 지침 / 상세한 업무 내용 및 방법 등 지원
경북	-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유아 및 교사 표준화 된 지원 기준 마련 - 유보통합 업무를 추진 담당 인력 지원(순증) - 보육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예산을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관
경남	- 유보통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부여와 지자체와 교육청의 동등한 업무 분배 - 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지자체 협의 요청 등은 효과가 미비함 이관을 해주는 입장에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의 소통 요구 - 중앙부처 주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대상 보육 사업 예산 이관 협조 조치
제주	- 유보통합 재원 확보: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산이 다양하며 제주도 예산은 나라의 세수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 구조라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 - 유보통합 대상 연령이 0~5세로 초등학교 규모 수준이 교육청으로 편성이 된다면, 추가업무가중 부담되므로 보육관련 업무를 유아교육과로 분리없이 진행 요망 - 지자체 정원 및 조직 이관 행안부 주체로 지원, 지자체에서는 인력 이관 지원 및 파견 인력 인센티브 제공

2. 정부의 5세 무상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실현 계획

- 그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양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 정책 배경: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지원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 출산·학령인구 감소 → 부모 비용 경감 통한 양육 친화 환경 필요
 -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초기 단계: 만 5세 동일 단계 무상화로 '통합 상징' 확보
 - 기존 제도: (예: 누리과정 지원금 ○○원, 추가 부담 ○○원 발생) → 잔존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형평성 문제: 기관 유형·지역별 실 부담 편차, 조기 교육·돌봄 접근성 차이
- 정책 목표(Goal) “모든 5세 아동에게 질 높은 무상교육·보육을 보편·형평·투명하게 제공하여 학습·돌봄 기초역량을 완성하고 유보통합 기반을 구축
- 적용 대상
 - 연령: 만 5세('19.1.1.~'19.12.31. 출생아)
 - 기관: 법정 인가 유치원(공·사립), 어린이집(국·공·민간·가정형 중 5세 반 운영)
 - 제외, 특례: (예: 재택보육 대체 지원 특수교육 대상 중복 지원 조정)
- 지원 범위 구분
 - 기본 교육·보육비, 교사 인건비 일부, 기본 운영비, 교육활동비, 특별활동(영어·체육 등 선택), 현장학습 추가, 선택 활동 상한 설정 가능
 - 급·간식비 (선택: 기본 중식 + 간식 1) 친환경·프리미엄 추가분, 단계적 확대 가능. 방과후, 연장, (시범: ○시간), 야간·심야, 필요시 가산
- 지원금 교부 및 지급
 - (교부 시기) 분기별 교부('25. 9월, 12월)
 - ※ 교육부의 예산 교부 일정에 따라 지자체(어린이집 분) 교부 시기 조정 예정
 - (교부 방법)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유치원 분) 및 지자체(어린이집 분)로 교부
 - (지원금 지급) 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 시스템(유아나이스, e-유치원)을 통해 분기별 신청·지급*, 어린이집은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월별 신청·지급

○ 집행 관리

-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집행 상황 현장 또는 서면 점검 실시
- ※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유아교육 부정수급 점검단, 원비 안정화 점검단 등 활용
- 집행점검 결과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 항목 외 사용 또는 기타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변경 명령 또는 반환 조치 등 실시

○ 단위 유치원

-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 협조
- (사립유치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무상교육 사업 안내 및 홍보 * [붙임1] 참조
- (사립유치원) 기 수납받은 학부모부담금 반환 및 결과 제출 * [붙임2] 참조
- 제출처: 관할 교육지원청, 제출 기한: 2025. 10. 17.(금)
-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산출 내역에 ‘무상교육’ 명시

세입	세출(예시)
보조금 및 지원금수입> 공통과정 및 방과후과정지원금수입> 공통과정 지원금> [무상교육] 5세 무상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육활동비>일반교육활동비>교재교구구입비> [무상교육]학습준비물구입비 · 선택적 교육활동비>그밖의 교육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무상교육]가을현장 체험학습비 · 선택적 교육활동비>그밖의 교육활동비>통학 차량 이용비> [무상교육] 통학 차량 주유비

○ 교육지원청

- 유아 학비 지원 시스템 개발 전까지(* 25.12월) 수기 청구·정산 협조
- 유치원에 소요액을 받지 않고, 교육지원청-교육청 간 업무처리
- 무상교육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

3. 유보통합의 주요 해외 사례

■ 대만의 유아정책과 유보통합 운영 사례

- 대만은 근현대사에서 한국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 요구가 높아짐.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맞물리면서, 정부는 유아 관련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해 옴
- 대만의 유보통합 진행과 유아 정책
 - 대만의 유보통합에 관한 관심과 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 감소로 2020년에 대만의 출산율은 1908년에 비해 약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음(37만 5천명 vs 16만7300명)
 - 대만 정부는 영유아기 교육 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정책을 중심으로 공적 투자를 진행함
 - 1998년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05년 유보통합 행정기관을 교육부로 결의, 이후 각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루어지다가 2011년 유보통합을 법률로 제정
 - 특히 주무부처 및 기관 선정이 가장 중요한 대만의 유보통합 정책의 쟁점이었으며 초반 내무부에서 많은 유아교육학계의 반발과 반대를 고려하여 교육부로 결정
 - 이와 함께 유보통합의 연령도 연령 이원화에서 초반 0-12세로 추진되다가 최종적으로 2~6세로 결정
- 대만의 아동교육 및 보육법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교육부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유치원과 탁아소를 통합하고 명칭도 유치원으로 통일하는 한편 2세부터 입학 전까지 관리 담당
 - 대만은 약 7천 개의 유아원이 있으며, 이 중 35%는 공립이며 나머지 64%는 사립으로 국공립 유아원은 무상교육을 시행
 - 교원은 교사, 교보원, 보조 교보원으로 나뉘며 학력으로 구분하면 유아 교사는 일반 교사(4년 졸업 및 시험동과)와 교보원(2-3년제 전문대), 보조 교보원(고등학교 졸업)으로 구분하고 특히 취학 직전 6세 유아는 유아 교사만 전담하게 하며 교사진급을 위한 재비용 교육 정부 부담

○ 대만의 유보통합 진행 과정의 지방정부 연계협력

- 2010~2012년까지 통합시설 운영 기준 마련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의 입안 증서와 설립허가증에 대한 통합 기준 마련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 2개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재정과 인력 또한 교육국으로 이관하였음

○ 대만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

연도	내용	비교
1997.12	- 정부 행정원회의에서 유보통합 논의 - 전국사회복지회의	- 교육부와 내무부가 유보통합 방안 연구를 제안했으나 미실시
2001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교육부와 내무부 공동의장 - 위원회내 3개 정책연구팀 조직
2004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통합방안 기획결과보고서’ 발표	- 각계각층의 유보통합에 대한 공감대형성, 이견 발생
2005.6	- 행정원에서 행정기관을 교육부로 결정 - 유보통합 법령개정	- 유보통합프로젝트 자문위원회
2007.5~ 2009.3	- 교육부 ‘아동교육 및 보육법 2회제출 ->행정원->입법원	- 유보통합에 대한 각계의 이견과 반발로 진행이 어려움
2010.4	- 입법원 교육문화원에서 ‘아동교육 및 보육법’ 초안 공청회	- 법안 채택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조속한 유보통합 필요 일치
2011.3	- 입법원에서 2-6세 유아에 대한 채택 심의 결의	
2011. 6	- 대만 유보통합 법안 최종 입법원 통과	- 총8장 60조항
2012.1	- 시행	- 유치원과 탁아소 명칭대신 유아원 통합과 교육부 관리 감독

참조; 문무경 외 2인 (202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제고)

○ 대만의 유보통합 특징 및 시사점

- 대만 유보통합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목표를 ‘통합법 제정’에 두었다는 점임.. 이를 통해 유아교육·보육의 연령 범위와 소관 부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청회 절차를 거쳐 2~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법」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지역 지자체와의 실무 협력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본 구조를 마련함
- 대만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 체계를 통합하지는 못했으며, 교사 양성체계와 자격증 등 법적 기반도 서로 달라(유아교사 vs 교보원),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을 위해, 대만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함(현재 영아 약 1:5, 유아 약 1:12 내외)

- 기존에는 개별 기관의 토론이나 공청회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소통 구조가 다층적·다변화됨

○ 대만 유보통합의 급식비 지원

- 대만은 유보통합(유치원 및 보육시설 통합) 과정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식비 등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준공영제'를 통해 급식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준공립 기관(공공성 강화 사립): 일정 수준의 급식비 등 운영비 지원을 받는 대신, 정부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육료를 책정함
- 공공기관: 학부모는 훨씬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함

○ 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 확대

- 대만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급식비 등 보육 관련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
- 맞춤형 보조금 지급: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취약계층 아동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
- 학부모 비용 부담 완화: 2023년부터는 공공 및 준 공립 보육기관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을 월 1,000 대만달러(약 4만 2,000원)로 제한하는 등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낮추었음
- 대만의 준공영제: 대만은 한국과 달리 준공영제를 통해 공공과 민간 시설의 급식비 등 보육비용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IV. 유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석

1. 급·간식비 예산지원 현황 심층분석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예산분석
3.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분석
4. 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실태 파악
5. 급·간식비 외 운영 기준, 교사처우,
전반적 격차
6. 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및
단계별 시행전략 제시

1. 급간식비 예산지원 현황 심층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No	분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	기본 보육료	567,000	500,000	414,000	280,000	280,000	280,000
	기관 보육료	660,000	359,000	244,000	0	0	0
	추가 보육료	0	0	0	0	50,000	50,000
2	야간연장보육료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기본 보육료 : 모든 아동의 연령별 보육료
- 기관 보육료 :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추가로 주는 보육료
- 추가 보육료 : 4, 5세에게 주는 누리 추가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 : 19:30~ 이후 야간 연장반 아동에게 시간당 4,0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별 유형 단가는 국공립과 민간, 가정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표 IV-1] 지역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황 분석

지원 수준	지원 단가(월)	지원금액 (월)	해당 시군구	비고
최고 수준	2,000원	40,000원	정선군, 태백시	월 40,000원을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
중상위수준	850원	17,000원	영월군	
	675원	-	원주시	쌀(월 1kg) + 유제품 형태의 현물 지원
중간 수준	650원	13,000원	춘천시	
	600원	12,000원	강릉시	
중하위수준	500원	10,000원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가장 많은 군이 포함된 그룹
	450원	-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지원
최저 수준	400원	8,000원	인제군	
	300원	6,000원	속초시	
미지원	260원	-	철원군	인재육성과 지원
	124원	2,480원	삼척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지원금
미지원	/	/	홍천군, 횡성군	횡성군은 '어사진미쌀' 지원(0-2세, 연10kg, 3-5세 연13kg)

○ 최고 수준 지원 지역

- 정선군, 태백시: 월 지원 금액: 40,000원, 일일 지원 단가: 2,000원, 두 지역 모두 광업·관광 특화 지역으로 지자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

○ 중상위 수준 지원 지역

- 영월군: 월 지원 금액: 17,000원, 일일 지원 단가: 850원, 도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지원 수준
- 원주시: 지원 방식: 현물 지원(쌀 월 1kg + 유제품), 금액 환산 단가: 675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독특한 방식 채택,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원 체계

○ 중간 수준 지원 지역

- 춘천시: 월 지원 금액: 13,000원, 일일 지원 단가: 650원, 도청 소재지로서 중간 수준의 지원
- 강릉시: 월 지원 금액: 12,000원, 일일 지원 단가: 600원, 강원도 동해안 권역에서 중간 수준 지원

○ 중하위 수준 지원 지역

-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월 지원 금액: 10,000원, 일일 지원 단가: 500원, 가장 많은 4개 군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 동해시: 지원 방식 : 농업기술센터 지원, 일일 지원단가: 450원, 타 부서를 통한 지원 시스템 운영
- 인제군: 월 지원 금액: 8,000원, 일일 지원 단가: 400원, 도내 평균보다 낮은 지원 수준

○ 최저 수준 지원 지역

- 속초시: 월 지원 금액: 6,000원, 일일 지원 단가: 300원, 도시 지역임에도 지원 수준이 낮은 편
- 철원군: 지원 방식: 인재 육성과 지원, 일일 지원 단가: 260원, 특정 부서를 통한 지원 체계
- 삼척시: 월 지원 금액: 2,480원, 일일 지원 단가: 124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지원금

- 미지원 지역
 - 홍천군: 지원 여부: 미지원, 비고: 지원 관련 내용 없음
 - 횡성군: 지원 여부: 미지원 (단, 쌀 지원), 지원 내용: '어사진미쌀' 연간 지원 (0-2세: 10kg, 3-5세: 13kg), 비고: 현금 지원 없이 쌀만 지원하는 형태
- 최고와 최저 지원액 차이: 40,000원 vs 2,480원으로 약 16배 차이를 보여주며, 지원 방식에 있어 현금 지원, 현물 지원, 부처별 분산 지원 등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미지원 지역으로 홍천군은 완전 미지원, 횡성군은 제한적 지원 등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 수준이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원 격차는 영유아의 균등한 영양 지원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도 차원의 균형적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문제점

- 극단적인 지역 간 격차: 최대 지원 지역(정선군, 태백시 월 4만 원)과 최저 지원 지역(삼척시 월 2,480원) 간의 격차가 약 16.1배에 달함. 이는 거주지에 따른 영유아의 식생활 지원에서 극심한 평등이 존재함
 - 지자체 재정에 의존적: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국가의 의무 사항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가 좌우됨. 이에 따라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이 약해지는 악순환 발생
- 지원 방식의 불균일: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원주시는 쌀과 유제품을 현물 지원하고, 횡성군은 쌀만을 지원하며, 동해시와 철원군은 타 부서를 통한 지원을 하는 등 그 방식이 제각각임. 이는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와 비교가 어려움
- 전액 미지원 지역 존재: 홍천군의 경우 표상에 지원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의 '미지원' 상태로 추정되며, 이는 해당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기초 식생활 지원이 전무함을 의미함

■ 개선 방안

○ 도 차원의 기준 마련 및 예산지원

- 강원도가 최소 지원 기준액(예: 월 10,000원)을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재정 취약 지자체에 대해 도 예산으로 보조하는 '격차 해소 보조금' 제도 도입 필요
- 이는 극단적인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강원도 영유아가 최소한의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 방식의 표준화

-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모와 어린이집이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물 지원을 고수할 경우(지역 농산물 활성화 등), 그 기준과 규모를 명확히 하고 품질관리 강화

○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및 제도화 요청

- 강원도 단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의무화하거나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 현재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급·간식비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노력 필요

○ 투명한 정보 공개 : 홍천군 등 미지원 또는 지원 내용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정확한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함

○ 강원도 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지자체 간 극심한 격차로 인해 영유아의 권리인 양질의 식생활 제공에 있어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금전적 차이가 아닌,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누리는 기본 복지의 질이 달라진다는 문제성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은 취약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 방식의 표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장 필요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예산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표준급식단가 및 지원 기준

(단위: 원)

급지	학생수	단설	병설
벽지	1~15명	5,520	4,800
	16~50명	4,600	4,130
	51~100명	3,930	3,530
	101~300명	3,430	3,160
	301~500명	2,860	2,620
	501~900명	2,510	2,320
	901~1300명	2,280	2,130
	1301명 이상	2,210	2,060
면	1~15명	5,390	4,680
	16~50명	4,440	3,970
	51~100명	3,780	3,380
	101~300명	3,280	3,010
	301~500명	2,860	2,620
	501~900명	2,510	2,300
	901~1300명	2,280	2,130
	1301명 이상	2,210	2,060
읍	1~15명	5,390	4,680
	16~50명	4,440	3,970
	51~100명	3,490	3,090
	101~300명	3,020	2,750
	301~500명	2,700	2,450
	501~900명	2,510	2,300
	901~1300명	2,280	2,130
	1301명 이상	2,210	2,060
동	1~15명	5,390	4,680
	16~50명	4,440	3,970
	51~100명	3,380	2,980
	101~300명	2,910	2,640
	301~500명	2,700	2,450
	501~900명	2,510	2,300
	901~1300명	2,280	2,130
	1301명 이상	2,210	2,060

- 강원도 내 유치원 표준 급식 단가 지원구조는 지역구분에 따른 4단계 지원 등급으로 구분
 - 벽지 지역: 최우선 지원 등급 (교육적 취약지역 대상 최고 단가)
 - 지리적 격리성, 교육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 반영
 - 최대 5,520원(단설, 1-15명)부터 최소 2,060원(병설, 1,301명 이상)까지 단가 범위
 - 면 지역: 우선 지원 등급 (농촌지역 대상 높은 단가)
 - 벽지 다음 순위의 지원 수준
 - 최대 5,390원(단설, 1-15명)부터 최소 2,060원(병설, 1,301명 이상)까지
 - 읍 지역: 기본 지원 등급 (소도시 지역 대상 중간 단가)
 - 중간 수준의 지원 단가 적용
 - 51~100명 구간부터 동 지역과 차별화된 단가 적용
 - 동 지역: 일반 지원 등급 (도시 지역 대상 기준 단가)
 - 가장 낮은 지원 단가 체계
 - 최대 5,390원(단설, 1-15명)부터 최소 2,060원(병설, 1,301명 이상)까지
- 학생 수 규모에 따른 8단계 차등 지원 체계
- 설치유형에 따른 체계적 차등
 - 단설 유치원: 독립 운영 유치원, 평균 10~15% 높은 단가 적용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내 설치 유치원,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 적용
 - 차등 비율: 소규모일수록 차이 큼(최대 720원), 대규모일수록 차이 작음(최소 150원)
- 규모별 차등의 경제적 합리성
 - 소규모 유치원(1-15명): 5,520원 (최고 단가), 대규모 유치원(1301명 이상): 2,210원 (최저 단가), 규모 경제 효과 반영: 약 2.5배 차등, 소규모 학교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적 지원 체계
-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메커니즘
 - 벽지 vs 동 지역 최대 차이: 1,150원 (51~100명 구간),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 지리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
- 설치유형별 차등의 교육적 의미
 - 단설 유치원 추가 지원: 독립 운영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병설유치원 단가 차등: 초등학교 인프라 공유 효과 반영
- 유치원 운영 형태에 따른 합리적 차별화

○ 단계적 지원 감소 곡선 분석

- 1~15명 → 16~50명: 약 17% 감소, 16~50명 → 51~100명: 약 15% 감소, 51~100명 → 101~300명: 약 13% 감소, 이후 점진적 완만한 감소 추세

■ 문제점

○ 과도한 단가 차별화

- 지역 간 차별: 벽지-동 지역 최대 1,140원 차이(51~100명 단설 기준)
- 규모별 격차: 최소 단가(2,060원) 대비 최대 단가(5,520원) 약 2.7배 차이
- 문제점: 지나친 차별화로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성

○ 복잡한 지원 체계

- 4개 지역구분 × 8개 규모 구분 × 2개 설치유형 = 64개 지원단가
- 문제점: 행정 처리 복잡성 증가로 업무 효율성 저하

○ 규모별 급식 단가 감소

- 소규모→중소 규모 전환 시(1~15명 → 16~50명)
 - 단가가 **16.7%~17.3%** 급격히 감소
 - 최대 920원 차이 발생 (5,520원 → 4,600원)
- 중소 규모→중규모 전환 시(16~50명 → 51~100명)
 - 단가가 **14.6%~15.1%** 추가 감소
 - 최대 670원 차이 발생 (4,600원 → 3,930원)
- 소규모 유치원의 재정 안정성 악화

○ 물가 변동 반영률 미비

- 변동 반영률 미비의 단가 체계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예: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실제 급식 질 하락 가능성

■ 개선 방향

- 지역구분 단순화
 - 기존 4단계(벽지, 면, 읍, 동) → **2단계(벽지/비 벽지)**로 축소
- 규모 구분 합리화
 - 기존 8단계 → **4단계(1-30명, 31-100명, 101-300명, 301명 ↑)**로 단순화
- 설치유형 통합 : 단설/병설 차등 폐지 → 동일 단가 적용
- 행정 간소화, 형평성 제고, 소규모 유치원 보호 강화
- 합리적 단가 차등화
 - 최대-최소 단가 격차 2배 내로 조정(현행 2.7배)
 - 단가 감소율 완화: 10% 내외로 조정
 -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점진적 지원 감소 방식 도입
- 단계별 개선 로드맵 제언
 - 1단계(당년~1년): 즉시 개선 가능 사항: 설치유형 차등 폐지(단설-병설 동일 단가 적용), 최소 단가 인상(현행 2,060원 → 2,300원으로 11.7% 인상), 행정 절차 간소화
 - 2단계(2~3년): 중장기 개선 사항: 단가 체계 단순화(64개 → 16개 단가 체계로 개편) 물가연동제 도입
 - 3단계(4~5년):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 강원도 유치원 급식 지원 체계는 교육적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 지나치게 복잡하고 차별적인 단가 체계로 인해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제안된 개선 방안을 통해 보다 단순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치원의 재정 안정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1일 지원 단가(1인 기준)

설립별	1일 급식단가(원)	비고
국립	· 강원도 표준 급식비 (식품비+운영비)	· 1일 급식 단가 중 85% 이상은 식품비로 사용
단설	· 강원도 표준 급식비 (식품비+운영비)	· 1일 급식 단가 중 85% 이상은 식품비로 사용
병설	· 강원도 표준 급식비 (식품비+운영비)	· (학기 중) 1일 급식 단가 중 90% 이상은 식품비로 사용 · (방학중 방과 후 과정) 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사립	· 3,280원	· 1일 급식 단가(3,280원) 중 70% 이상은 식품비로 사용

※ 【2025년 학교급식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국 공립(단설, 병설)유치원 급식 세부 지원기준 안내예정

○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

- 지원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지원 기간: 2025. 3. 1. ~ 2026. 2. 28
- 기준 일수: (유·초·특수) 186일, (중·고)183일
- 지원단가(1일): (유·초·중·고·특수) 490원(친환경(우수) 식 재료비 440원, Non-GMO 식재료 지원비 50원)

■ 예산 분담

지원대상	친환경 식재료비		시군	운영비
	교육청	도		교육청
유, 초, 중, 고, 특	50%	25%	25%	100%

○ 도내 산 제철 과일 급식 지원

- 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지원 기간: 202.3.1~ 2026. 2. 28.
- 지원단가: 주 1회 650원(총 37회 지원)
- 지원 품목: (1순위) 지역 산 과일 > (2순위) 도내 산 과일
- ※ 지역 산 제철 과일 부족 시 도내 산으로 공급
- 예산 분담: 교육청 100%

3.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분석

강원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 간식 지원 현황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지역의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지원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함. 본 보고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2023). 보육사업안내와 교육부(2023). 내부자료 활용하여 작성함.

[그림 IV-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구조

- 어린이집: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속운영. 기본보육(09:00~16:00)중심, 앞뒤로 연장보육
- 유치원: 교육과정은 짧고 집중(대개 4~5시간), 이후 별도 방과 후 과정으로 연장

■ 어린이집 운영 구조

- 아침 연장 보육: 대략 07:30경 시작, 기본 보육: 09:00~16:00, 연장 보육: 16:00~19:30
- 특징: 하루가 끊임없이 이어짐,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돌봄 수요에 유리

■ 유치원 운영 구조

- 교육과정: 4~5시간, 일반적으로 09:00~13:00 또는 09:00~14:00, 방과후 과정: 3~5시간(교육과정 종료 뒤 추가 운영)
- 특징: 오전(또는 이른 오후)에는 교육 중심, 이후엔 돌봄·특기 활동 등으로 연장, 방과 후 참여 여부·시간은 기관별로 차이

■ 어린이집 지원 현황

- 강원도 내 어린이집 급 간식 지원은 시군구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최고 수준: 정선군, 태백시(월 40,000원)
 - 중상위 수준: 영월군(월 17,000원), 원주시(쌀 1kg + 유제품 현물 지원)
 - 중간 수준: 춘천시(월 13,000원), 강릉시(월 12,000원)
 - 중하위 수준: 평창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월 10,000원), 동해시(농업기술센터 지원)
 - 최저 수준: 속초시(월 6,000원), 철원군(인재 육성과 지원), 삼척시(월 2,480원)
 - 미지원: 홍천군, 횡성군(횡성군은 '어사진미쌀' 지원)

■ 유치원 지원 현황

- 유치원 급식 지원은 학생 수와 지역(벽지, 면, 읍, 동)에 따라 단가 결정.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벽지 지역: 학생 수 1~15명 기준 월 5,520원(단설)
 - 면 지역: 학생 수 1~15명 기준 월 5,390원(단설)
 - 읍 지역: 학생 수 1~15명 기준 월 5,390원(단설)
 - 동 지역: 학생 수 1~15명 기준 월 5,390원(단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이 분석

- 지원 금액: 어린이집의 경우 최고 수준인 정선군과 태백시는 월 40,000원을 지원하는 반면, 최저 수준인 삼척시는 월 2,48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임. 유치원은 학생 수와 지역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며, 벽지 지역의 단설 유치원은 월 5,520원 지원받음
- 지원 형태: 어린이집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이 혼재되어 있음. 예를 들어, 원주시는 쌀과 유제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반면, 유치원은 주로 현금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
- 지역별 편차: 어린이집은 지역별 지원 금액의 편차가 크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지원을 받는 지역도 존재함.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일관된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학생 수와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름

■ 예산편성 구조 비교

○ 부처별 예산 격차

- 교육부(유치원): 2025년 기준 연간 예산 650억 원
- 보건복지부(어린이집): 2025년 기준 연간 예산 530억 원
- 격차: 약 120억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원 현황 심층 분석

- 어린이집: 지역별 지원 금액의 편차가 크며, 최고 수준인 정선군과 태백시는 월 40,000원을 지원하는 반면, 최저 수준인 삼척시는 월 2,48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임
- 유치원: 학생 수와 지역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며, 벽지 지역의 단설 유치원은 월 5,520원을 지원받음

■ 시설 유형별 단가 현황

○ 유치원

- 국공립 유치원: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지원받음
- 민간 유치원: 국공립에 비해 낮은 단가를 지원받음
- 가정형 유치원: 가장 낮은 단가를 지원받음

○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높은 단가를 지원받음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에 비해 낮은 단가를 지원받음
- 가정형 어린이집: 가장 낮은 단가를 지원받음

4. 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 실태 파악

■ 최신 지원 정책 현황

- 5세 학부모 부담 경감: 2025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아동에게 월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계획 진행 중
- 급식비 인상 조치: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료 단가가 5% 인상되었으며, 이는 급식비·간식비 지원 확대로 이어짐
- 아침·저녁 급식비 기준: 월 2,000원(1식) 으로 책정되어 기본 식사 제공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부 지역에선 실질 비용과 괴리가 있음
- 지원 제한 대상: 누리과정 지원 기간 3년 초과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시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양육 수당은 별도 지원

5. 급·간식비 외 운영 기준, 교사 처우, 전반적 격차

■ 운영 기준 격차

- 시설 유형별 차등 관리
 - 국공립 시설은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교육청 직영 관리 체계를 적용받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사·분석 지원
 - 민간 시설은 운영계획 수립 시 수요 조사만 의무화되어 있어, 지역 특성 반영도 23% 낮음
-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
 - 교육부(유치원)와 복지부(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동일 연령대 아동이라도 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 제공 시간, 안전 점검 주기 등이 상이

[표 IV-2] 교사처우 격차

구분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초봉 기준	280만원	235만원
수업 준비시간	주당 5시간 보장	미지원
대체교사 지원	100%	63%

- 근거: 유치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인건비 15%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지자체 재량에 의존
- 정책 개선: 2025년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로 교사 자격증 호환성 검토 중

6. 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및 단계별 시행 전략 제시

■ 자원 확보 3대 핵심 전략

○ 예산 구조 개편

- 부처 간 통합회계 구축: 교육부(유치원)와 복지부(어린이집) 예산을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금」으로 재편을 통한 사업 시행 전략 변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 확충

- 특별교부금 신설: 「유보통합 특별세」 도입으로 전국 지자체 자원 0.3%p 추가 확보
- 산간 지역 가중치: 인제·양구군 등에 15% 추가 배분
- 재원용도: 디지털 인프라(40%), 교사 처우개선(35%), 급식비 격차 해소(25%)

■ 단계별 시행 로드맵

○ [1단계] 준비기(핵심 과제)(2024~2025)

- 법적 기반 마련: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2025년 상반기 목표)
-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강원교육청 주관 통합 관리 시스템(G-ECMS) 개발
- 시범 사업: 5개 교육지원청(강릉, 춘천 등)에서 예산통합 시행

○ [2단계] 확장기(주요 목표)(2026~2027)

- 예산통합률 70% 달성: 2026년 45% → 2027년 70%
- 교사 처우 표준화: 초봉 격차 5% 이내로 축소
- 지역특화 모델 적용: 해안 지역(속초) 수산물 급식센터, 산간 지역(인제) 동계식단 표준화

○ [3단계] 성숙기(최종 목표)(2028~)

- 전 시설 유보통합 완료: 2028년 말 기준 100% 시행
- 자체 자원 확보율 40%: 지방세 증대 + 민간 협력사업 수익금 재투자

V. 유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사례 비교 및 문제점

- 1. 강원특별자치도 급·간식비 회계 분석**
- 2.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점**

1. 강원특별자치도 급·간식비 회계 분석

가. 급·간식비 회계 분석 특징

- 강원도 사례 자료(표본)에서 유치원 급식비(수익자부담) 회계 표시는 총세입 대비 1.2%~4.4% 수준이나, 이는 ‘전체 급·간식 원가’가 아니라 ‘학부모 직접 납부분’만을 반영
- 어린이집은 급식·간식 ‘식 재료비’가 세출에서 전액(예: 51,559천원,10.9%) 드러나는 반면, 유치원은 동일 성격 비용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타계정에 흡수되어 외부에서 총원가 파악이 곤란. 결과적으로 유치원 급식 투자 필요성이 과소 인식되고, 기관 유형 간 단가 형평·영양 품질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 이에 유치원의 기존 회계 부분에서 관 항목을 분리하여 전체적인 회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급식비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총원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회계코드 정비해선 필요
- 강원도는 ‘표준 원가 구조 + 1인 1일 단가 공시 + 조리 인력 전문성 + 친환경 확대’ 4축을 2027년까지 단계 구축해야 유보통합·영양 형평 기반 확보 가능
- 도의회는 ① 표준단가 연구용역, ② 회계 코드 정비·공시 조례, ③ 조리 인력 역량/대체 Pool, ④ 친환경·지역 농산 촉진 패키지를 2025년 예산에서 선제 반영할 필요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례 비교 분석

[표 V-1] 사례 비교 연구 분석

(단위 : 천원)

유형	내용 1	내용 2	기타
유치원(A)	총세입 : 567,386	급식비 및 간식비 수입 (학부모부담) ; 6,826	- 전체 비중의 1.2%
유치원(B)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415,597	급식비: 19,320/ 이자: 1,058/ 기타행정:270 /순세계 잉여금: 1000	- 전체비중의 4.42% (19.320/437.245)
어린이집(A) 세출	총세출 470,115	급·간식비재료비 : 51.559(109%)	- 나무와 새 어린이집
어린이집(B) 세입	총세입 314,828	세입내 ‘급식비 별도계정 없음’ (세출에서만 식별)	다솜 어린이집/ 식재료 재원은 정부지원 보육료. 운영보조금 등 복합재원에서 총당

주. 한계 : 각 기관 재원 이동수, 연령 구성, 실제 급식일수·식단 횟수·조리인력 급여 세부 분해 미제공 → ‘표시기준 격차’ 중심 구조 분석

다. 어린이집 식품비

■ 어린이집 운영일수(가정: 250일/연중 보육_예)나무와 새 어린이집(식재료비 51,559천 원)

- 단가 3,000원 가정 시 필요 식수 총합 = 51,559천 ÷ 3,000 ≈ 17,186식
→ 17,186 ÷ 250일 ≈ 68.7(일평균 재원 아동수)
- 단가 3,500원 가정 시 일평균 ≈ 59명 → 중형 어린이집으로 합리적 범위
- 양자 비교 시 어린이집 식재료 세출 금액은 ‘총 음식 재료비’에 상대적으로 근접하지만, 유치원은 분절·은닉 구조

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정량적 차이

■ 유치원과 어린이집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방식 차이점

- 유치는 무상교육 항목에 식자재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무상급식 강화
- 어린이집은 급·간식비 지원이 제한적이고 부모 자부담이 많음
- 교육청 예산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별도 지원하는 시도가 있음(예: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 0~5세 영유아는 이용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급·간식비 차이 발생

- 유치원의 경우 <표준 유아 교육비>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2년부터 시·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용>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원 한계 발생 및 절대적 지원 단가에서 차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시행 기준이며, 정부는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 이상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교육청마다 상이하나, 무상급식비(급식 1회)는 1인당 평균 2,600원 지급
- 따라서, 유아 2,500원에서 간식비 비율(35.8%) 제외하면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는 급식비만 1일 1,000원 정도 차이 발생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에서 인건비, 운영비, 급·간식비 등을 모두 지출해야 하는바, 도내 동일 연령의 영유아가 불평등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표준보육비용-표준 유아 교육비 금액 비교

[표 V-2] 표준보육비용 및 유아 교육비 비교

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		표준유아교육비 (유치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기본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보험부담금 시간외수당	표준인건비	정규직 교원 기본급 정규직 직원 기본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보험부담금 -
교재교구비	실내 교재교구비 소모품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시설비	시설유지비 실외 교재교구 비품성 교재교구	표준공통운영비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운영비	-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위생관리 급식관리 교사실 운영 보육교직원 복리비 영유아복리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급간식비	급간식비		-

출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을 중심으로. 2023. 양미선

○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단가 산출

-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 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식 1회와 간식 2회에 대한 식품비가 포함되어 있고, 급·간식비로 1일 2,500원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심 급식 식료품비를 지원받고 있음
- 지역교육청별로 상이 하나 아동 1인당 1일 평균 2,600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고 보면 됨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의 급식비 중 간식비가 차지하는 35.8%이므로, 1일 급·간식비 지출 기준인 2,500원 중 1,605원이 급식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면 됨
- 앞서 살펴본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금액(1일 약 2,600원)과 비교하면 1천 원 정도가 차이 남. 지역교육청별로 급식비 지원 단가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서울, 대전, 전북 교육청과 비교하면 1일 1,500원 정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남

-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급·간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 발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급·간식비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하며 예산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이용 유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함
- 어린이집 만3~5세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1안)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질 높은 급 간식 제공
 - 2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지원 격차 완화를 위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단가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출 기준과의 차액분을 추가 지원하는 2개 안을 설정하여 지원 단가를 산출함

■ 어린이집 급·간식비 세입과 세출 표준보육비용 - 표준 유아 교육비 금액 비교

○ 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음

[표 V-3] 금액 비교표

구분	급·간식비 세입	급·간식비 세출
· 간식비 세입과 세출	<p>정부 지원 보육료(111목) - 0~5세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p>	<p>급식·간식 재료비(315목) 1) 적용 범위 :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 복리후생비(216목)의 ‘급량비’는 보육 교직원의 야간 근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2) 일반사항 : 보육 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 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1,9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2,300원('24년 표준보육비용)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5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3,700원('24년 표준보육비용) - 위의 비용은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 처리</p>

2. 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점

가. 재원의 불투명성 및 책임 주체 모호성

-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보육료 안에 포함되는 만큼, 실제 급·간식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기관마다 차이가 큼. 이는 운영되는 보육료 전체 중 어느 정도를 급·간식비로 할당할지는 기관 운영 방식, 인원, 지출 구조 등 다양한 요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이에 따라 “같은 보육료” 라도 어린이집 간의 식사의 질과 식사 구성의 격차가 발생함
-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도 vs 시군 간 예산 분담 관련 법적·행정적 근거가 모호하고 상호 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관 단위 예산 확보에 어려움 발생
 - 지역 내 급 간식 제도 운용에 따른 기관별 책임 주체성의 모호함으로 인해 근본적인 지역 간 기관 간 격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나. 예산 규모 부족 및 단가 문제

-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가 유치원과의 차이는 물론 어린이집의 지역 및 기관 상황(현원 수, 조리 환경, 식재료 비용 등)에 따라 다르고 낮아서, 실제 식단의 질이나 조리 및 서비스 여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급·간식비 단가 차이와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 및 기관 현황에 따라 기준 제시가 모호함
- 현장 조사 결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간 급·간식비에 대한 항목의 추가와 삭제 및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과 어려움 발생으로 운영자와 담당자 사기 저하(예: 표준교육비)
- 지속적인 물가상승률의 영향은 물론 급 간식 관련 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재료 및 물가 상승, 식품비 상승, 운송비, 보관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급·간식비 자체 단가만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다.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현황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사회적 통념상 어린이집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결합된 기관으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 기능이 추가된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3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통해서,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라고 밝혔음
 - 같은 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서도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도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여전히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만 0~2세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라. 정책 간 연계 부족 및 제도적 미비

- 국가 단위의 유보통합 정책 시행 전후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지원 정책의 이해가 부족하고 담당자와 전문가 중심의 제도적 연계성에 대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함
- 유치원 급·간식비는 별도로 지원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지원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장의 의견 반영이 쉽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중앙정부 보육료 포함 항목 중 일부여서 추가 지원이나 지자체 만으로의 제도 수립 및 예산 책정과 지원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사전 급·간식비 관련 예산편성 시 선제적인 법률·조례 정비가 미흡하여, 제도 시행 시점에 예산 배분 책임·절차 등이 지연되고 사전 테스트를 통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마. 지역 격차 및 형평성 문제

- 도시권과 농촌·산간 지역 간 식재료 조달비, 물류비, 조리 시설 등의 격차가 있어 동일한 급·간식비 단가라도 실제 제공되는 식품의 질 등이 차이 남
 - 전국 기준 지역별 Living cost의 차이가 심하며 업체 규모, 학생 수, 해당년 농수산물 등 식자재의 수급 요건 등에 따라 급 간식 단가와 급 간식 내용에 차이가 크게 발생함
-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예산 여건이 더 열악하여 식단 질, 위생·시설 보강 등에 투자할 여력이 낮고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어려움
- 전국 권역별 생활 수준이 다르고 평균 수익 또한 차이가 크므로 획일적이며 동일한 기준으로 급 간식의 질적 보완과 양적 지원이 쉽지 않음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지역 간(인구, 소득, 생활 수준, 지형, 산업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여건과 형편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보편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바. 자원 분담에 대한 조정 및 예산 편성 개선 검토 필요

- 유보통합의 전반적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원 부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조정하기 위한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개별 시군 간의 부담 비율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형평성 있게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함. 필요한 경우 추정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적 고려가 요구됨
 - 아울러 예비비·잉여금 등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재정적 완충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함

VI. 정책 대안 및 실행 방안

1. 급·간식비 기준단가(안) 마련 및 2026년도 예산추계
2. 강원특별자치도 급·간식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3. 강원형 급·간식비 통합 비전
「강원형 공평 급·간식비 체계 구축」

1. 급·간식비 기준단가(안) 마련 및 2026년도 예산 추계

- 현행 기준 분석 및 개선: 유치원 급식비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안)을 기반으로 지역별 물가 수준과 영양 기준을 반영한 단가 체계 재정비 필요. 예를 들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물가 격차를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 도입
- 예산 추계 방향
 - 향후 단계적 확대를 위해 연평균 5% 인상률 적용 (물가상승률+ α)
 - 유보통합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분(만 3~5세 무상교육 대상자)을 반영한 예산 산정
 -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급·간식비 예산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재정 분담 모델 및 단계별 이행 전략 필요
 - 분담 구조 설계: 도(道): 인프라 구축(시설 확충, 장비 지원)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재원 담당, 시군: 운영비(인건비, 급·간식비)의 40% 분담, 취약계층 추가 지원 예산편성, 교육청: 교육과정 개발·평가 및 교사 연수 예산 전담
- 유보통합 정책 추진 구조와의 연계 방안
 - 거버넌스 강화: 교육부 주관하에 도-시군-교육청 합동 협의체 구성, 분기별 성과 점검 회의 운영
 - 예산통합 관리 시스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통합한 「유보통합 재정 플랫폼」 구축으로 중복 지원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정책 일관성 확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유보통합을 목표로 단계별 재정 투자 계획 수립(예: 만 3세 무상교육 확대에 맞춰 시군 예산 증액), 교육·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특별회계」 신설 검토

가. 유보통합연구회 유보통합 자문위원회 간담회

-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교육청,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대표, 도의회 의원이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및 강원형 유보통합모델 개발 방향에 대한 간담회 실시

[표 VI-1] 유보통합연구회 유보통합 자문위원회 간담회 내용

날짜	소속	직책	안건 및 주요 발언 내용
2025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유보통합 팀장 나숙미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보고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계획 및 진행 현황 설명
2025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책부장 김윤덕	· 현장 교사들의 체감 부족 문제 제기 · 유보통합의 본질적 목적은 영유아 중심이어야 함 강조
2025년 1월 5일	강원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김효중	·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반영 부족 문제 제기 · 시범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강조
2025년 1월 5일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유중운	· 유보통합이 명분만 내세워서는 갈등 심화 우려 ·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 필요성 강조
2025년 1월 5일	학부모 대표	대표 정지현	·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 정보 부족 문제 제기 · 방학 기간, 국공립 및 사립 선택 기준 등 학부모 관점에서의 개선 필요성 제안
2025년 1월 5일	강원유아 교육행정 협의회	회장 채현숙	· 교사 양성 체계 일원화의 필요성 및 현장 불안감 해소필요 · 시범 사업의 모델화 및 멘토링 체계 강화 제안
2025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김길수	·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연구방향 제시 ·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필요성 강조
2025년 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최재민	· 유보통합의 목적은 무상보육·교육 실현 · 강원도 현장에 적합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성 강조
2025년 1월 5일	민간분과 위원회	위원장 안현숙	· 유보통합의 목적은 영유아 격차 해소 및 양질 서비스 제공 · 행정 체계 및 재정 운영 효율화 필요성 강조

나.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및 담당자 간담회(2025. 10. 17, 원주)

- 강원특별자치도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및 원감 등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 사립유치원의 급·간식비 항목 구성과 운영 현황을 파악
 - 어린이집과의 급·간식비 제도 차이 및 현장에서 겪는 주요 문제점을 진단
 -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표 VI-2]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및 담당자 간담회 내용

날짜	소속	직책	안건 및 주요 발언 내용
2025년 10월17일	강원사립 유치원 연합회	회장 김효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위한 급·간식비 차이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및 부족 문제 제기 · 급·간식비 항목과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강조 ·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연구 방향 제시 · 유보통합의 목적은 영유아 격차 해소 및 양질 서비스 제공 · 사립유치원의 현재 급·간식비 관련 현황과 장기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필요
2025년 10월17일	원주 사립유치원	원감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태생적인 급·간식비 차이에 대한 격차와 현장의 실태에 대한 의견 제시 · 갈등 해소를 위한 것보다 다양한 소통 창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성 강조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장에 대한보다 세부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한 선행 활동 제시 · 급간식비 집행의 수입구조 파악 및 총예산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격차 분석이 필요함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내 유보통합 정책이 각 주체 간의 의견 차이와 명확한 로드맵 없이 추진되고 있어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체감도가 다소 낮음
-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선정 기준의 엄격함,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등 문제점 발생
- 교사 양성체계, 예산 배분, 행정 체계 등 주요 쟁점 해결 필요

○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 현장 교사, 학부모, 원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 유보통합의 목적을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함
- 시범 사업의 모델화 및 멘토링 체계 구축을 통해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 방향

-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 필요성 강조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간 균형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

○ 유보통합은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본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강원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 추진할 필요 있음

2. 강원특별자치도 급·간식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가. 전문 인력 운영 안정화를 통한 급·간식 격차 해소

○ 조리사 등의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과 체계화

- 영유아기는 건강하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관련법령인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나, 과거 실태조사(2021 전국 보육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중 조리사 자격이 없는 조리원이 근무하는 비율이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중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13.2%로 조사되어, 영유아 급식이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문제점으로 확인됨
-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 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 인력 운영과 관련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아동인력자원개발센터 등이 업무협약 및 MOU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조리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인재풀 운영, 교육·관리 체계화 등이 가능해지며, 특정 기관이나 이해관계자 중심의 제한된 대응을 넘어 전사적·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협력 기반의 인력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신규 조리 인력의 채용·교육·현장 모니터링을 포함한 표준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인력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여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 위생·안전 분야의 정기 교육, 영유아 대상 영양·급식 운영에 대한 현장 지원이 병행된다면, 우수한 현장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무 가능한 일당형 조리사 인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원자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내 어린이집 조리 인력 수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 현황을 고려하여 조리사 등의 배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리 인력 산정은 과거 원아 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급식 제공 대상에는 교직원도 포함되므로 급식 인원 산정 시 원아와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
 -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시 인원 산정의 정확성이 필수적임
 - 이러한 기준 변화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22.7.1.)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개정, 급식 인원 기준을 기존의 '원아 수' 에서 '원아 수 + 급식 교직원 수' 로 확대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 어린이집의 경우, 0세를 위한 이유식부터 야간 및 연장반을 위한 석식까지 식사의 형태와 시간이 다양하므로 이에 맞는 인력 배치가 요구됨
 - 어린이집의 개별적 특성과 운영 여건에 맞추어 조리사의 역할 범위와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급식 보조 인력 및 지원 인력 등 급식 인원수에 따른 조리 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급·간식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현장의 특성과 상황 차이를 반영한 세부적인 현안들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임
 -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급·간식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장 최적화된 운영에 무리가 없는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 응급상황(예: 급식 인력 공백 상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급 간식 관련 기관 중심의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은 기본적인 지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조리사 부재로 인해 급식 공백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간식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리사 채용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원장이 직접 급식을 조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 시 대체 인력 운영, 긴급 지원 체계, 조리 공백 방지 대책 등 사전 대비 체계의 구축이 시급함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급·간식비 격차에 대한 단가 현실화 고려

○ 급·간식비 실태조사 및 급·간식비 분리 등 세부 사항 검토

-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항목 차이를 고려하고 급·간식비를 보육료에서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정부의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이 통일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급·간식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도 적정 급·간식비를 보육료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유치원도 급식비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총원가 파악이 가능하도록 회계코드 정비와 유형별(예:사립유치원)로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단가의 명확한 산정이 요구됨
- 기존 실천 방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부 실천 방안(교육부, 2023 : 6)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 지침 및 적극 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리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실제적인 급·간식비 항목 및 모호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예:수입구조 파악, 총예산 분석)를 자세히 실시하여 제도 운용에 피해가 없도록 정책에 반영이 필요함

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

- 과거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아 급식·간식 재료비를 1,900원 이상, 유아는 2,500원 이상으로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보건복지부, 2022)
 - 여기서 유아 2,500원은 급식 1회와 간식 2회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는 2022년 2학기 유치원의 중식 1회 평균 식품비 2,810원보다 낮아 단가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급식 지원 단가는 영유아 현원(급·간식 대상 인원)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 표준교육비 산정 연구(2019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 1인당 월 급·간식비로 일반 마트 단가를 기준으로 0세 33,200원, 1~2세 45,100원, 3~5세 64,000원을 제안했으며, 유기농 식재료 구매(30% 수준) 단가를 기준으로 0세 44,700원, 1~2세 61,900원, 3~5세 88,000원을 제안하기도 하였음(박진아 외, 2019)
- 이상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급식 단가에서 식품비의 비중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식품비 확보 및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원단가 내 식품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2022년), 식품비와 운영비는 학교급식 경비로 운영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분리 운영함
 - 시설개선 매뉴얼 구축을 통해 급 간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량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시설과 설비 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가 요구됨
 - 예를 들어 초등학교 급식실을 함께 사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체형에 안 맞는 시설(식탁과 의자)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의 빈 공간(유희교실) 등을 활용하여 대상 아동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맞는 조리실 및 급식 환경을 위한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생과 안전을 위한 친환경 조리기구 및 낡은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위생·안전, 영양 및 급·간식 관리 실태를 상호 점검하면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급식의 질은 단순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조리법과 식단 구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조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 조리법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내 조리학교, 조리학과, 조리 동아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조리 인력에게 급·간식 조리법 및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영양, 급·간식 관리 실태를 상호 점검하며,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됨
 - 이를 위해 항목별 구체적인 점검 지표를 중심으로 기관 유형별·개별 기관별 통일된 급·간식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급식 전문 기관의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식재료 관련 재료 정보와 안심 구매업체 자료를 분석·제공함으로써 구매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가정에서의 식사 및 영양 관련 교육을 통해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영유아기부터의 바른 먹거리 경험, 개별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라. 현장 평가 및 점검 프로세스 수립

- 급·간식 환경의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청, 교육청의 현장 지도점검과 합동점검, 점검 항목 평가, 학부모 현장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의 일관적인 활동 즉, 지속적인 방문과 평가 및 지도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마. 환경 개선 기준을 통한 급간식 제도의 내실화

- 급·간식 환경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는 영유아 대상 급식시설과 설비 기준 및 필수 조리 배식기구,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강원형 급·간식비 통합 비전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구축」

가. 3단계 로드맵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공평 급 간식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통해 효과성 제고

단계	연도	핵심과제	산출물
1 투명화	2026	회계 코드 재정의(식재료/조리 인건비/위생 분리), 1인1일 단가 산식 시범(표본 30기관)	‘강원 급식 원가 표준 지침’ 1.0
2 표준화	2027	표준단가(최소·표준·강화) 도입, KPI(영양·잔반·친환경) 공시	‘기관별 급식 성과 대시보드’
3 고도화	2028	조리사 100% 배치, 친환경 30% 달성, 변동단가(소규모 가산)	품질보고서 & 인센티브제

나. 로드맵에 대한 지표(KPI) 수립 및 지원

- 로드맵 수행에 대한 분야별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인센티브 지원 검토

분야	KPI	측정	목표(* 27)	인센티브(예시)
영양	영양기준 충족률	식단 분석	≥90%	우수기관 1% 추가 지원
위생	위생지적률	점검	≤1%(중대 0)	위생우수 인증
효율	잔반율	중량(kg)	≤15%	절감분 일부 환류
품질	친환경 비중(원가)	회계	평균 30%	40% 초과 2% 가산
전문성	조리사 자격 배치율	인력DB	100%	교육비 전액 지원
투명성	보고 적시율	시스템	100%	미제출 패널티

다. 향후 입법 및 · 행정 분야 지원 및 고려 사항

- ‘강원형 영유아 급·간식 표준 및 공시 조례’ 제정: 회계 코드·지표 의무화
- 2025 연구용역: (a) 실측 단가 조사(표본 100기관), (b) 구조방정식(규모·지역·품질 변수)
- 급식 데이터 플랫폼 예산 반영: 식단·식수·원가 입력 → KPI 자동 산출
- 친환경 식재료 공급망: 로컬푸드 센터+학교급식 센터 공동입찰·물류 통합 시범

Ⅷ. 유보통합 기반 급·간식비 격차 해소 및 성과 제고 방안

1. 성과 제고 방안
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현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의 기초가 되는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안착하는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다각적으로 모색함

1. 성과 제고 방안

가. “이해관계자·대상자들에 대한 타당한 최우선 고려(대상자 이익)” 원칙 준수

- 다양한 협의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인 영유아의 현장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는 것임
 -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 기준이 간과되거나 잊히기 쉽고, 영유아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정책 수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쉬움
 -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기성세대는 연구와 정책 과업 시행 과정에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스스로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신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 공직자,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은 보다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적이며 친화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영유아의 권리와 이익을 챙기고 발전시켜야 함
 - 또한 기성세대의 현재 이익과 영유아 세대의 미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안 간 절충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 연구의 최우선 대상자인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성숙하고 본질적인 태도가 필요함
- 정부가 기존 2024년 7월에 발표하고 설계한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일일 12시간 운영시간을 위해 4시간 단위로 교사를 배치)이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서 첫 단계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청 특색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
 - 이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지난 25년 4월 2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 에 따르면 교육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을 145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정부는 운영 성과에 대해 집중하여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이후 돌봄 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가 추진하는 영유아 관련 사업들에 대해 그 수혜자인 학부모들은 사업 확대와 더 실효성 있는 운영시간을 희망하며, 양질의 교육과 참여 교사의 근로 시간 준수와 업무 부담을 줄일 다양한 인력의 추가적인 배치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됨
-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아동 관점에서는 과연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임
 - 아동에게 한 기관에서 긴 보육·교육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정착되지 않은 교육 시스템은 아동의 정서와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나. 정부와 지자체 및 정책 이해관계자의 다각적인 교류와 소통

■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및 현장(유치원, 어린이집)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 강화'

- 정부가 유보통합의 격차 해소와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선도교육청 사업'은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부족한 예산 지원과 어린이집의 개별 사업 참여 저조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교육청 내 지원 인력 부족과 공모 참여의 소극성, 공립 중심 추진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정책 수행의 효과성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는 정책 수립과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고 정부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함
 - 일부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기도 했으나, 조직이 효과적으로 확대되지 않아 선도교육청 과제를 통한 유아교육 지원 강화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체 사업 예산은 2023년 당시 약 39억 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예산 증액이 시도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 실행에 따른 실효성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은 설립 유형, 지역, 지자체 지원금 및 지원 방식 등에서 차이가 커서 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높음

- 이러한 복잡한 영유아 시설 현장의 통합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실제적 효과성 및 체감도 확인이 필요하나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시범 사업 수행 시, 정부는 정책 발표를 통해 사업의 주체와 대상,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기본 매뉴얼과 대략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 수행 주체인 이해관계자와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기관과 담당자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과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단순한 원론적 기준이 아닌 대상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최우선 수혜자인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과 어린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정부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저항과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 공직자, 학부모, 영유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 사례뿐 아니라 해외 우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숙고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유보통합 기반 급·간식비 지원 정책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성찰과 노력이 필수적임
-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건설적 대립을 수용하는 협력적 태도로 행동하는 자세가 요구됨

다.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올바른 제도 선택과 시행

- 유보통합 급·간식비 격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 수혜자의 바른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요구됨

- 과거 연구(2022.4)에 따르면, 유보통합 관련 설문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격차 해소’ 라는 용어가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응답함
- 이는 단순한 현장 오해일 수도 있으나,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무엇인가 낮다’ 라는 전제를 내포한 용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는 것임
 -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 교사 보수교육,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CCTV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교육의 실효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음
- 유치원에서도 공·사립에 따라 유보통합을 비롯한 현장 사안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 차이가 매우 다양함
 -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학부모와 원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인력·시설 개선, 프로그램 질 향상, 예산 및 인력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반면, 공립유치원은 교사의 신분이 국가에서 보장되므로 이러한 노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시선이 존재함
 - 그러나 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이 높으며, 이러한 각 주체의 특성과 현장의 실제 모습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호 협력적 작용을 위해 중요함
- 최근의 학부모들은 체계적이며 자녀들의 미래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
 -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자질” 이었으며,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프로그램” 으로 나타남(김은영·최은영 외, 2022)
 - 이는 젊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을 과거 학부모보다 정보와 현장 참여를 통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주변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관을 선택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 급·간식비 격차 해소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함

- 동시에 수혜 대상인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학부모와 깊이 있는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적극적 협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각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곧 격차가 아님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자세로 유보통합에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됨
-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속도와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맞추며,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되, 진행 일정은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조절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유보통합 과업 추진은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급진적 추진은 지양해야 함

2.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가. 현장 중심의 의사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

-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격차 해소와 같이 현장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침체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교류가 필수적임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숙고의 시간을 마련하고, 주체 간 공청회를 개최 함으로써 현장 구성원들이 깊이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협조적이며 효과적인 사전 조정 및 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실무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 진행 작업과 사전 진단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를 위한 의견 교류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전달 체계 구축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현장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자체의 유보통합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당자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분석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 지역 최고위층에 현안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논의를 보완해야 함

-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면, 유보통합 초기 약 3년간 지자체 지역별 담당 공무원들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미팅과 교류를 통해 사전 기준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함
-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현장의 문제를 즉각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사전달 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함

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세부 과제 조정과 조율

■ 다양한 현장의 모든 기관이 참여하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격차 해소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음
 - 특히 현장의 모든 유형별 이해관계자(교사, 학부모, 전문가, 공직자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유보통합 기반 사업을 진행하고, 세부적·구체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어느 한 주체의 의견만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와 교류의 다양화를 통해 상시적 참여 장을 마련하고, 운영상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핵심사안(법 제·개정, 급·간식비 지원 및 시설, 교사 자격·양성 개편 등)의 중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

- 유보통합 기반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예산, 인력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
 - 유보통합 시 보육 재정의 이관 범위와 교부금 사용 범위 등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장은 관련 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숙고한 후 발표함으로써 현장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전문가 의견과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책 수립을 추진해야 함

■ 각 지역 단위의 유보통합 급 간식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 및 제언

○ 유보통합 기반 급·간식 예산 관리와 이관 논의를 위한 기구 마련 필요

-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이원화 제도이며,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관할 권한이 없고, 보육 분야는 예산, 인력, 기관 수 등 모든 부문에서 유아교육 분야보다 규모가 큼
-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보육과 규모가 작은 유아교육의 통합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쟁점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이 우선이며,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유보통합과 급·간식 관리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필요함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협의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이는 연구자나 전문가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현장 사안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현장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됨.

○ 지자체별 유보통합 관련 균형 있는 전문 인력 배치 필요

-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유아교육 전문가(장학사, 장학관 등)가 실제 보육 현장에 대해 기본 지식 외에 구체적 현장 지식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학사, 장학관과 같은 보육 현장 전문가가 부족하고,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은 순환 근무로 인해 장학사·장학관에 비해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기 어려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 체계적 지원과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 인력이 현장을 진단·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Ⅷ. 결 론

이상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 기반 급·간식비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아래와 같이 마무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 기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환경의 조정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청, 교육청의 지도·점검, 합동 평가, 학부모 모니터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등 일관성 있는 평가 체계와 지속적·체계적인 지도 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장의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이 확인됨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첫째: 정책 방향·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세부 방향 확정 이전이라도, 도-교육청-시군-현장 참여형 거버넌스를 선 구축하여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형별 기관, 학부모, 전문가 패널을 포함한 상시적 현장 의견 수렴과 분기별, 사안별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함

○ 둘째: 재정·급식비 조정

- 급식비는 유보통합 신뢰의 핵심 요소로, 도-교육청 분담률 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기존 지원 축소·전용을 지양하고, 추가 재원 발굴 및 단계적 상향 지원, 3~5년 중기 재정계획(MTF) 편성, 물가·식자재 지수 연동 단가 조정 메커니즘 마련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셋째: 표준 원가 단가 체계 마련 및 회계코드정비 마련

- 시설 유형, 연령, 급식 횟수, 조리 여건 등을 반영한 표준교육비·표준보육비 및 급식 단가 모델을 산출하고, 현실적 애로사항 반영이 필요함
- 유치원 기존 회계 항목에서 급식비를 분리하여 총원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 가중치(산간·도서·소규모 원) 반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기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유형의 평균·분위별 비용 실측을 통해 현장 운영 주체들의 실제적 고민을 반영한 객관적·구체적·타당한 원가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역 가중치 적용을 통해 산간·도서·소규모 원 등 규모의 경제 한계를 보정하고, 현실적·공정한 단가 산출을 실현해야 함

○ 넷째: 급 간식 제도 운용의 형평성과 질 관리

- ‘같은 권리, 같은 수준’ 구현: 이용 시설에 관계없이 아동이 받는 기본 서비스 수준(급식·안전·교육 시간·교사 대 아동 비율)을 최소 기준으로 보장
- 질적 담보를 위한 점검 장치: 재정 투입과 연계하여 최소 기준 준수, 성과·품질 지표(위생·영양·안전·교육과정 운영) 점검, 현장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민·공 격차 완화: 지원은 아동 기준으로 설계하되, 취약 시설에는 개선 인센티브와 컨설팅 패키지 제공 검토, 보육 경쟁력 중심의 객관적 평가

○ 다섯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급 간식 관련 전 유형 시설의 원가·인력·인프라 자료를 표준 템플릿으로 수집·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과 내용·공개(요약)를 통한 정책적 함의와 의사결정 진행
- 비용, 성과 대시보드 구축: 재정 투입 대비 아동성·만족·안전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벤치마킹 진행

○ 여섯째: 수요자(학부모)의 요구사항 및 기대 반영

-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욕구 차이를 조사해 서비스 메뉴(급식 횟수, 돌봄 시간, 특식·알레르기 대체식 등) 선택권 확대 등 아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 운영
- 의사소통 표준화: 급식 영양 정보, 알레르기 관리, 비용 고지의 투명성 강화 등 현장의 실제 사항과 정보들을 수요자(학부모)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소통 확대

○ 일곱째: 이원 구조의 격차를 고려한 통합 설계

- 현재의 교육·보육 이원 체계를 무시한 단순 통합은 역효과. 중장기적 제도 통합을 논의하되, 단기적으로는 기능 연계(교원 연수, 급식 공동조달, 안전기준 통합)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단계 추진
- 시설의 현장 종사자 비율·자격·근무 여건의 현실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로드맵 제시로 현장의 혼란과 충격 완화 필요

○ 여덟째: 공정성·재정 형평

-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 만큼 특정 유형만의 우월 지위 지양, 아동 중심 보편적 권리 보장에 근간과 초점을 두고 재정 집행 고려

- 지역 내 인구 및 지형적 특성에 따른 취약지역·소규모 기관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차등 지원(가중치)을 통해 실질적 형평성 달성 필요

○ 아홉째: 어린이집 조리사의 교육, 시설, 근무 환경 개선

- 조리사의 개인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급·간식의 질이 좌우되며 조리사가 영양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다수 존재하므로 관련 교육 및 부족한 시설개선 고려
-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로 대응하며 때로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원장, 보육교사가 대신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정 필요

이상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급·간식비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정리하였음

본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관계자와 학부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보고회를 통해 실제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동안의 정부 영유아 보육정책과 시설 운영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조건에 따른 결과였으나, 이제 시대적 변화와 영유아 성장 기반인 급·간식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세계적 기준을 반영해야 할 시점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단위의 유보통합 추진단에 보육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교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육성·채용하여 유보통합 전담 조직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현장 전문 인력을 유보통합 관련 과제와 안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지자체, 교육(지원)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를 통해 구성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위생·안전, 영양 및 급·간식 관리 실태를 상호 점검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급 간식 제도의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과 의사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유보통합의 기반인 급·간식비 격차 해소는 ‘재정 명확성(분담·지속성), 아동 권리 중심 표준화(표준 원가·질 기준), 데이터 기반 현장 참여’를 3대 축으로 삼아 추진해야 함을 확인함. 또한, 하향 통합을 지양하고 단계적 상향 평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강원도형 유보통합이 지속 가능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보통합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각 주체 간 협력, 그리고 학부모와 아동 등 수혜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제도 설계에 집중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진행에 함께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연구회장 원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구회원, 의회 관계자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분야별 대표자분들의 참여와 협조에도 감사드린다.

▣ 참고 문헌 ▣

- 이윤진, 김은설, 조혜주 (2024).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방안 제고(II)
- 동폴잎, 윤지영, 장정윤, 김경미(2024).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구자연, 도남희, 김영민(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개선 방안 연구
- 문무경, 박창현, 정유나(2023).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제고(I)
- 김해은혜학교(2025). 202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보육업무 분석 보고서
- 도남희·김진미(2014).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교육부(2022). 시도교육청 2학기 식품비 단가 인상 현황-내부자료.
- 교육부(2023).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양미선.정유나(2023).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비용지원 중심으로
- 연합뉴스 방송(2021.05.04).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어린이집도 포함”
- 박진아·유해미·최효미·김동훈·김태우·위세아·김송이·유영준(2019).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2025). 유보통합 추진 기본 계획(안)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2025). 경기도교육청
- 성남시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2025). 성남시
- 교육부(2024) 세계최고 영유아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 김대욱(2025). 강원특별자치도 차별없는 유보통합, 무상급식 지원부터. 경상국립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유보통합연구회(2025). 자문위원회 간담회
- 구자연(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

강원 유보통합 유치원 · 어린이집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발행일 : 2025년 11월

발행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의회사무처(전화) : 033-249-5707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council.gijan.g.go.kr/r>

연구기관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http://www.kpa.re.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이나 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승인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